



# 2019 Spring 교육개발

## 특별기획

### 포용적 교육가치란 무엇인가?

#### CEO칼럼

2019년 우리나라 교육의  
싱크탱크로서 KEDI의 역할

#### 파워인터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

#### 특별기획

1.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2. 포용국가의 초·중등교육의 방향
3. 포용국가에서 고등교육의 방향과 과제

####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1. 2019 교육부 주요 정책 방향
2.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사업 및 정책 제안

#### NEW 교육 연구

평가공학 기반 학습분석

#### 세계의 교육

1. 네덜란드의 교육 형평성
2.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미래

#### 교육현장Report

1. 학생들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2. 무지갯빛 고운 꿈이 커가는 작은 지구촌 학교

#### 교육통계Focus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형평성의 현 주소



ISSN 1228-291X

# Contents

**교육개발**

2019 봄호



ISSN 1228-291X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원장 반상진

**편집장** 신경희

**홍보출판심의위원**

최상덕, 신경희, 김혜진, 허은정, 조옥경, 서영인,

장혜승, 김지수, 김주아, 박경호, 유경훈

**편집실** 유수화

**디자인** 디자인편집 031.893.8315

**인쇄** 다원기획 044.865.8115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발행** 2019년 03월(제46권 210호)

**계간등록번호** 진천, 마00001

**등록변경** 2018년 4월 26일

**정가** 6,500원

**구독문의** 043-5309-231 [keditor@kedi.re.kr](mailto:keditor@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04 CEO칼럼

2019년 우리나라 교육의 싱크탱크로서 KEDI의 역할

## 06 파워인터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

## 14 특별기획

“포용적 교육가치란 무엇인가?”

1.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2. 포용국가의 초·중등교육의 방향
3. 포용국가에서 고등교육의 방향과 과제

- 31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 1. 2019 교육부 주요 정책 방향
  - 2.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사업 및 정책 제안
- 41 **NEW 교육 연구**
  - 평가공학 기반 학습분석
- 46 **세계의 교육**
  - 1. 네덜란드의 교육 형평성
  - 2.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미래



- 59 **교육현장Report**
  - 1. 학생들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 2. 무지갯빛 고운 꿈이 커가는 작은 지구촌 학교
- 71 **교육통계Focus**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형평성의 현 주소







## 2019년 우리나라 교육의 싱크탱크로서 KEDI의 역할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은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싱크탱크로서 2019년에 KEDI가 해야 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당연히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교육 의제를 설정하며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부와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가 요구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연구기관으로써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먼저 파악하고 개발해서 오히려 교육부에 제안하는 일입니다.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와의 협력은 당연하고, 비판과 견제의 임무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거꾸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교육체제 전체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대내외적으로 수행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정책 개발 역량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연구를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KEDI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포지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체제 개편,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과 같이 시급한 교육 의제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으로 일자리 감소와 계층 간 격차 증대, 저성장 현상의 심화 등 비관적 전망을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교육투자를 통한 21세기형 인재양성이라는 주요 국가전략에 대한 의제와 직면해있습니다. 더불어, 밖으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 협력이라는 글로벌 의제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의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간 협력적 교육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개혁 정책과 교육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당면한 의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래교육 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인터뷰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교육부장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이 지난해 10월 2일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있고,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2월 15일(금),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을 만나, 지난해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른 유치원 운영에 관한 향후 정책, 온종일 돌봄 지원단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전략,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및 고교 학점제 추진 배경과 방향, 대학의 자율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 2019년 현장 중심의 변화, 사람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원년으로 첫발 ”

**반상진** 「교육개발」을 구독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신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교육개발」 독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개발」은 올해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육정책전문지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개발」이 교육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현장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정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교육정책의 성과를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교육정책이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에 대해 교육부 내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학사비리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립유치원 등과 같은 문제들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을 아파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와 정책, 그리고 교육부 내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올해의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교육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그런 변화를 이끌면서 사람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원년으로 그 첫 발을 내딛고 싶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교육정책이 바뀌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모든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출범 ”

**반상진** 취임 후 가장 먼저 제안·의결한 사업이 ‘온종일 돌봄 지원단’인데,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부총리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유은혜**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한 현장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 지원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돌봄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 모든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돌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돌봄 인프라 등 여건이 다르고 준비 정도나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같이 논의함으로써,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등 우수사례들을 확산하여 추진하고, 유치원도 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장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 진행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장**  
**유치원 폐원·운영절차 보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회의의 투명성 강화** ❖❖

**반상진** 유치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무엇이고 향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은혜** 작년, 국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올해 11월이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치원 교육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폐원·운영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여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상진** 올해 신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원장님께서 교육재정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정부하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고교무상교육은 그냥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차이나 지역,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의 책임하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참여 정부 때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완성하여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감님들이 교육자치를 실현하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조속히 확정된 후 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반상진** 고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법률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유은혜** 법률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공약이기도 했고, 법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 시행을 하려면,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되어야 하고,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재정적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학기 시행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추경을 편성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이나 수업방식, 평가 등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확산** ☞

**반상진** 2019년 교육부의 업무 추진 방향은 '사람중심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 회복' 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연동시켜서 최근에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유은혜** 작년에 100여 개의 고교학점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하여 지난 연말에 결과 발표를 지켜봤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정과제 자문위원을 할 때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국정과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시 선택교과제를 시행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이 10여 명의 아이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 평소에는 몰랐던 아이의 장점이나 특성을 알게 되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재능이나 보완할 점 등의 파악이 가능해서, 평가할 때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에게 맞게 평가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잠자는 교실, 아주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학업에 뜻이 없거나 대학 경쟁의 구조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대입경쟁 구조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갖고 해결하려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확대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이나 수업방식, 평가 등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들도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개별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선택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반상진** 지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세미나에 참여해서 토론할 때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나 하는 것과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와 연동해서 정착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에 교육의 다양성,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으며, 학교체제의 다양성을 위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바람에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선택권의 부분은 존중하고 미래가치를 위해 필요하며, 학교 내로 들어온 것이니까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2025년 대학입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사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교육부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은혜** 당장 대입제도와 연계해서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좀 길게 보면서 미래교육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의성, 자기주도성과 협업능력이 미래인재에 필요한 역량인데 교육과정이 그런 부분에 맞춤형 교육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워 주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협업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1:1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학교 안에 있는 교육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과정일 것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약할 때 22년에서 25년으로 시기를 늦췄더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현장에 잘 접목되어 실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와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가되, '속도보다는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 대학이나 전문대학 중심의 지역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거점 국립대 또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연계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반상진** 속도보다는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말 참 좋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이어 대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려고 법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법 처리를 하고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고, 이것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을 수행하고 미래인재를 성장시키는 정책과제 연구 등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초·중등과 관련된 업무, 권한과 책임이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이 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 역할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을 갖는 고등교육의 혁신방안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줄고 교수들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임하는 시기가 됨으로써 대학 스스로 혁신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실 생존의 위기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실제 기초학문이나 학술분야 연구의 역할을 아직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런 본래의 역할을 하면서도 후속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평생교육, 직업교육, 진로와 관련된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기가 어려운 급속한 변화의 시대이며 백세시대라고 하는 고용사회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중심의 지역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거점 국립대 또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용사회를 지향하면서 각 부처의 사회정책들을 종합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 부총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어 교육부 자체 혁신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사업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였고,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지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재정으로 기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여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대학이 평가 부담 없이 자율적인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제가 가진 교육의 원칙과 기본의 핵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있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만큼은 국가가 출발선을 보장하고, 실패해도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



**반상진** 부총리님 나름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제가 가진 교육의 원칙과 기본의 핵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제도교육의 시작 단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만큼은 국가가 출발선을 보장하고, 실패해도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포용적 혁신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상진**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특별히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혜**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연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참여기관으로,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을 이끌고 교육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우리 교육 정책이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하에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PROFILE

### 유 은 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대 제59대 교육부 장관  
취임일자 2018년 10월 2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병)으로 당선되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교육, 문화, 방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역임하고 있다.





# 특별기획

---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포용국가의 초·중등교육의 방향

장수명(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포용국가에서 고등교육의 방향과 과제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포용적  
교육가치란  
무엇인가?

”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신철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포용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포용’을 향한 노력은 포용적 성장, 혁신적 포용 등의 용어로 10여 년 전부터 연구되고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UN이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슬로건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추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추진해오고 있다(안해정 외, 2016). 이 글에서는 포용국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포용국가를 위해 교육 영역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 먼저 포용국가란 무엇인가?

포용국가에서 ‘포용’(inclusiveness)은 배제(exclusiveness)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간다는 의미로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포용국가는 기본적으로 교육,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계층,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함께 아우르며



보편적·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는 포용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포용국가 정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 기본적 권리,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고, 각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확장하는 국가. 그 기반 위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집단적 창의성과 혁신역량으로 전환하는 역동적 국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이고, 무한경쟁이 아니라 안정된 삶의 보장이 진정한 자유의 원천과 혁신의 원천이 되는 상태(Anu Partanen, 2017)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7)

포용이 기반이 되어야 혁신도 가능하다. 지금 당장 생존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그야말로 무모한 모험으로 치부될 수 있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다. 자유안정성(구교준, 2018)의 개념에서도 자유는 안정성에 기반하여 더 펼쳐질 수 있듯이, 혁신도 포용의 원리 속에서 구현되어야 끊임없는, 다채로운 혁신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OECD의 국가 비교를 통해 인적역량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된 생활을 하며 높은 지식수준을 지닌 국가에서 혁신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한편 혁신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것’(creating what is both new and valuable)이라고 정의한 Kao(2007:9)는 혁신이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동시에 좋은 삶을 영유하는 기반이라고 제시하고 있다(Phelps, 2013).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상당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제도적 맥락과 환경하에서 더 우수한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과학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닌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신철균 외, 2018). 혁신은 기본적으로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혁신은 포용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그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성은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뤄지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포용국가에서 지향하는 포용과 혁신의 개념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그림] 포용국가에서 혁신과 포용의 관계 •

### 포용국가가 왜 필요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에서 애쓰모글루와 로빈슨(2012)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계급 간의 갈등과 지속을 방치하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를 폈을 때 그 국가와 조직은 붕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국가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개발을 통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뤄 왔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체와 아주 완만한 성장이 가능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상태이다. 이민자들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며 나갈지는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는 성장성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이해하며 계층의 차이를 줄이고, 집단적 협력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따라서 포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수반하고 실천해야 하는 가치가 되어 있다. 이는 한 국가만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포용국가를 위한 교육적 포용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포용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영역은 여러 곳이 있긴 하겠지만, 교육은 사회·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혁신의 발판이자, 고용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영역보다 포용국가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따라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에서의 포용의 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를 생각하면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장애우, 빈곤층, 무주택자, 성소수자, 탈북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취약 계층을 생각해보면 경제적 소외층(저소득층학생), 지역적 소외층(농어촌학생), 출신적 소외층(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신체적·정신적 소외층(건강장애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집단은 학습적 소외층으로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PISA의 학업성취수준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PISA, 2015).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이어진다. SKY를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교의 문제는 상당히 굳어져 있으며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상위의 대학, 지방이 아닌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학생들의 이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포용국가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성’과 ‘혁신성’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취약계층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일반적·보편적인 학생(학습자)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도달하기는 요원하다.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특정한 요인만이 아닌 경제(소득)-사회(관계)-교육(학습)적인 다각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성열관, 2018)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중단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이들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신철균 외, 2018). 이러한 학생들도 포괄적으로 ‘학습적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 단순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입식·암기식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고, 학교의 공부나 나의 미래와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버티고 견디는 학생’(신철균 외, 2018)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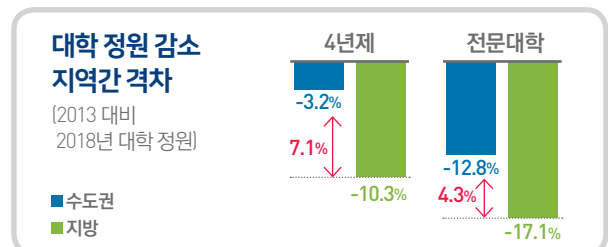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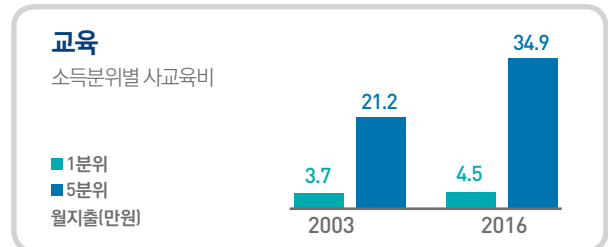
이처럼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교육적 포용의 대상을 기존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확대해야 한다. ‘학업 성취(achievement)’면에서의 기초학력부진학생을 포함한 ‘학습 실현(accomplishment)’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습적 소외집단’으로 광범위하게 포용하여야 우리가 생각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크 프렌스키(2018)는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는 책에서 성취(achievement)와 실현(accomplishment)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수백 년 동안 공교육은 개인의 학업적 발전과 성취에만 관심을 두어왔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역량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역점을 두고 있지 못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교육 혁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담보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간주해왔던 교육적 포용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포용국가를 위한 현 교육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가 포용과 혁신을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포용 국가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한계점들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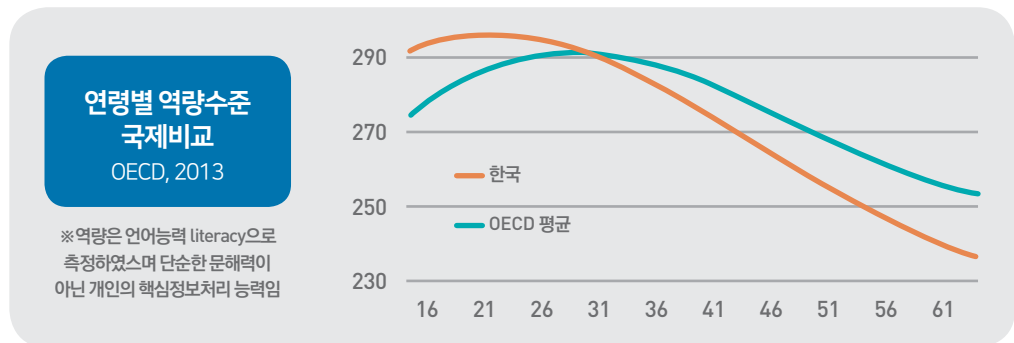
첫째,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작금의 모습은 계층 간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를 보더라도 2003년엔 1분위가 3.7만원, 5분위가 21.2만원의 월지출을 하였는데, 2016년엔 1분위가 4.5만원, 5분위가 34.9만원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 정원이 수도권 4년제 대학은 3.2% 감소한 것에 비해 지방의 4년제 대학은 10.3%나 감소하여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학생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간 대학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정 경쟁의 기반이 상실되는 것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보완적 조치들이 요구된다.



\*출처: [정책기획위원회, 2018: 23, 26]

둘째, 여전히 평균주의적 인재 양성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 Ross(2015)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의 평균적 인간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ISA 점수는 최상위권이지만 인지적 부분이 아닌 창의성과 다양성 측면에서의 교육 수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열화된 상대평가와 표준화된 평가 체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적성 등을 펼칠 기회는 누리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하에 미래직업과 대학진학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현재를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정은 경직되어 있고 학생의 자치 활동은 차단되어 있어,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하며 학습과 생활을 해나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셋째, 고용과 직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체제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연령별 역량 수준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20대 초중반 이후 급속히 타국가들에 비해 급속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초·중·고등학교까지는 학습을 위한 많은 시간 투여와 높은 역량을 보이지만, 사회진출과 직업 체제에 편입된 이후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역량 신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 시대에 있고 그에 따라 직업 체제도 변화되고 있어 고용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 심지어 현재 진입해 있는 성인들도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편안하고 고용이 보장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직업은 공무원(25%)과 공기업(18%)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신철균 외, 2018 재인용).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이 필요한 벤처와 창업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편안하고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 시장으로 청년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재학습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출처: 정책기획위원회(2018: 44) 재인용.

###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혁신의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주요한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사회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의 장학금 지원을 실현·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에서 학생들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에 있어 포용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초·중등교육에서만 아닌 고등교육에서도 적용되는 관점이다.

과거의 포용 교육 관점은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특수교육이나 교육복지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포용국가, 좀 더 수식어를 붙이자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학습적인 면에서 관심과 흥미를 갖지 못한 채 ‘버티고 견디는 학생들’까지도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지닌 소질과 가능성을 실현해보려는 욕구,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역량을 갖추려는 욕구가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과 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의 진정한 포용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을 갖고 능동적인 학생이 되어 학습이 진행될 때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신철균 외, 2018). 이러한 방향은 기존의 ‘학업 성취(성적)’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신철균 외(2018)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바라는 삶은 학업적 성취만을 위한 삶도 아니요, 미래만을 위한 삶도 아니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현재와 미래가 조화되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교육’, 즉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학업적 성취만이 아닌 사회적 실현을 중시하고, 집단적 평균이 아닌 개별적 특성과 주도성을 인정해나가는 것이 곧 교육의 혁신일 것이며,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지향하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적역량 강화의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협업 지향적 교육과정-수업-평가체계의 일관된 혁신으로 표준화된 상대평가 체제를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학생주도의 다양한 교육자치 실현, 그리고 고등교육 차원에서는 융복합 교육과정 활성화와 대학 간 연계·협력형 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것 등이 있다.

셋째, 교육-고용-복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전생애 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교육 자체만으로는 해결보다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과 맞물려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미비는 교육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이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화되기보다는 서열화가 되어 있고, 복지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고용만이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학생과 청년들은 ‘안정’을 향한 경주를 하게 된다.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의 소득격차가 벌어진 노동시장’ 하에서는 ‘좋은 대학’ 진학을 통한 ‘좋은 직업’의 노동시장 진입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 간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노동시장'으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며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적 안전망이 아닌 학습적 안전망, 혹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전생애 학습체제가 제공되어야 기술혁명의 고용 변화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인적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안정의 조화를 통한 개인 행복이 이뤄지는 선순환 사이클처럼(구교준 외, 2018), 교육에 있어서도 소위 명문대학이 아닌 대학, 혹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직업선택과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거기에서 창의성과 모험심이 발휘될 수 있다(신철균 외, 2018).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학습 역량이 증진되고 변화되는 산업 체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때 고용 시장에서 역량 있는 인재가 적지적소에 투입되고 활용될 수 있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교육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며 학령기에만 집중된 학습 체제가 아닌 성인기와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학습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개인 특성의 다양성을 키우고 직업의 다양성을 보는 안목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교준, 최영준, 이관후, 이원재(2018).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솔루션 2050 페이퍼 1. LAB205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열관(2018).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서울: 학이시습.  
 신철균, 김지혜, 유경훈, 이승호, 송경오, 최영준, 김덕년(2018). 고교 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학생들의 시선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안해정, 서예원, 윤종혁, 김은영, 임후남, 박환보, 최동주, 김명진(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역. 서울: 시공사.  
 마크 프렌스키(2018).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 하성심 역. 서울: 한문화.  
 정책기획위원회(2018.9.6.).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정책기획위원회.  
 아누 파르타넨(2017).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노태복 역. 서울: 원더박스.  
 Kao, J. (2007). Innovation nation: How America is losing its innovation edge, why it matters, and what we can do to get it back. Simon and Schuster.  
 Phelps, E. S. (2013). Mass flourishing: How grassroots innovation created jobs, challenge, and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s T. (2015). The End of Average. 정미나 역(2018). 평균의 종말. 서울: 21세기북스.



# 포용국가의 초·중등교육의 방향

## -자기형성과 시민형성을 지지하는 기초교육-

장수명(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초·중등 시기의 배움과 익힘은 개인적 삶의 기초이자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입문이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아실현을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때 '자아'는 사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학습을 통해 고정된 그 자아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 속에 자기만의 씨앗 같은 고유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관계와 세계를 대면하고 경험하면서 자기를 만들고 형성해간다. 감나무 씨앗의 고유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연과 만나면서 개별 감나무의 고유 형체와 열매를 만들어 가듯이 그러하다. 더욱이 인간은 변화가능성이 높은 존재로서 이성과 감정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형성의 폭이 매우 넓고 깊다. 이런 이유로 돌봄을 받는 것과 교육과 학습의 기간과 기회는 그리고 그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초교육인 초·중등교육은 우선 개인의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형성이라는 발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삶은 때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험난하기는 하나 성장과 발달은 인간의 과학이 아직 그 비밀을 일부만 알고 있을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여정이다. 개인은 태어나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익히고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이력을 열어 성장해 나간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으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물론 때로 그 개인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은 성장하면서 그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사랑을 해준 공동체나, 또는 파괴하고 괴롭힌 자기 성장의 걸림돌이 된 사회, 즉 공동체의 일원, 즉 시민이 된다.

개인의 자기형성의 과제는 공동체 형성 즉 개인의 시민됨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불어’는 아닐지라도 ‘관계맺음’ 속에 산다. 그 관계맺음의 첫 출발은 가족이지만, 가족의 삶과 개인의 삶에 시민사회와 국가는 각별히 중요하다. 시민 공동체(사회)와 국가 공동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움과 익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배움과 익힘은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갈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는 개인들이 독립적일수록 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데 있고 좋은 공동체일수록 개인들을 독립된 개별자로서 존중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동체를 방기하거나 공동체가 ‘단결’과 ‘일치’를 강요하여 개인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왜곡된다. 독립된 개인과 공고한 공동체는 긴장과 역설의 관계에 있다. 개인들이 독립적인 개별자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되 동시에 공동체에 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익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여정에 함께 할 공동체는 개인들을 구속하며 제약하여 성장의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들에게 자기발전의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개인들과 관계를 통해 공동체도 변화하고 발전하며 성장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축소되거나 위함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 개인들이 독립적일수록 공동체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공동체가 강할수록 개인적 독립성은 약화될 수 있다. 이 위험을 넘어서야 한다. 개인의 독립성이 공동체의 견고함을 지지하고 공동체의 건강함이 개인들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역설과 긴장을 교육의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 기초교육으로서 초·중등교육은 독립적 개인형성과 공동체의 시민형성이라는 역설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도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이며 시민이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이거나, 지역사회, 교회, 동문회, 동아리, 학교, 전문가 사회 등 사회적 공동체이든지, 자기가 속한 지역자치단체나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이거나,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경제적 공동체의 경계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넓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로컬푸드로 지역민의 생산물을 사고팔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미대륙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전 세계 전 인류가 사실상의 하나의 간접적인 경제적 공동체이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생태적 공동체이다. 산들과 계곡, 강과 들판, 바다와 섬들, 기온과 기후 등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자연은 심성을 기르는 풍경을 제공하며 삶과 세계의 풍성함을 더해준다. 이 자연적 공동체-생태계 공동체는 다른 성격의 공동체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풍부하면, 사람들의 관계는 상호 너그럽게 되고 서로를 수용하게 된다. 환경의 빈약함과 열악함은 사람들의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공동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다.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일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성은 개인 삶의 여정에서 그 삶의 방향과 의미를 규정하기도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고 특히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동체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독립적인 공동체 시민들로 인하여 발전하고 성숙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 다수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는 매우 거센 계곡 급류나 엄청난 해류에 휩쓸려 있고 개인은 급변하는 세계와 공동체를 마주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등 세계적 자연환경의 변화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관계에 갈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치공동체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경제성장의 지체나 불평등의 심화는 한편에서 자국 내의 긴장을 만들어 사회적 통합에 해악을 끼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시점이다. 세계적인 이민과 국제화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범위가 세계적 단위로 커진 경제공동체가 기회와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내·외생적인 기술변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연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화를 통해 개인과 계층 사이의 일자리와 소득 배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어떤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평화체제의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이를 시민들의 집합적 지혜와 지성과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갈등과 휘발성이 큰 포퓰리즘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

개인적 삶의 여정과 공동체 발전의 상호관계는 정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 이는 매우 역동적이며 때로 비선형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육을 다시 숙고할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는 이 역동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개인적, 집단적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반성과 성찰의 기초 위에서 포용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우리의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성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통계 수치가 있다. 2017년 OECD의 Better Life Index이다<sup>1)</sup>. 이 지표는 유·초·중등 교육에 던지는 함의가 크다. OECD가 주목하는 통계의 하나는 25~64세 인구의 87%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이는 OECD의 74%보다 크게 높다. 동시에 PISA 성적도 높아 교육체제의 질이 매우 높다고 OECD 기구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을 안다고 믿는 사람을 76%로 OECD(평균 89%)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공동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선거에서 전반적인 선거참여율(89%)은 높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최상위 20% 사람들은 거의 100%, 최하위는 20% 사람들은 72%로 OECD 평균 격차(13%)보다 매우 큰 차이(28%)가 난다. 사회적 공동체와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성과 포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교육·학업성취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각자도생의 불안과 불신으로 사회적 공동체와 정치적 공동체가 충실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자연환경-물과 공기의 질-도 열악하며, 일과 삶의 균형도 삶의 만족도도 낮다. 자연의 공동체와 일터의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삶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직장 내의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갑들의 횡포와 남성-여성 관계에서 me-too 운동에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교육체제를 갖추고, 시민들의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나라에서 왜 이토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다른 많은 나라의 과제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학업성취도, 질 낮은 교육체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다 갖고도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자기형성과 시민형성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는 않는가? 우리 교육의 첫 핵심적인 문제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아동과 학습자들이 자기형성의 과정에서 독립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그 독립성은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다. 높은 PISA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독립된 개인,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드라마 <SKY캐슬>이 상징하듯이 학생들은 부모와 학교의 관리대상에 더하여, 사교육의 관리대상이고 그 목표는 입시결과이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설계하는 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삶을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1) 나라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위험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개인형성, 특히 독립성의 과제는 또한 중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우리 중등교육의 품질관리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학교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에서 졸업서도 출석요건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 무절제한 교육체제, 잡자는 아이들을 방기 하면서 소수의 학업성적 상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주의 교육에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관리대상인 아이들의 무수한 규칙위반 행위를 우리는 수없이 보기 때문에 입시에 성공해서 성장한 어른들, 예를 들어 법치를 흔든 사법농단의 주역들 같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무책임한 반시민적 위헌적 행위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기초교육의 두 번째 지향점은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공적 자질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공공성 또는 공공선이라고 이를 불릴 수 있다. 학교는 성장하는 아동이 가족을 벗어나서 만나는 첫 공적 공동체이다. 친구를 사귀고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나누고 배려하는 것을, 자신과 타인들의 실존을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이다. 모두가 함께 형성하는 학급이나 학교의 문화, 특히 또래문화와 교사-학생관계의 학교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 문화가 학생들이 특히 지식을 탐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더불어 배우고 협력하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은 자기발달과 더불어 자신의 시민적 자질을 몸과 마음, 습관으로 익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특성과 자질뿐 아니라 타인의 특성과 자질, 처지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시민적 미덕을 쌓아갈 것이다. 학교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만들어 가는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쟁분위기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학업성취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민성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학교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말하고 논의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안심하고 안전한 관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익히고 나누는 지식과 지혜는 이미 인류공동체가 함께 형성한 것이고 공적인 것이다. 학생들이 익히는 이 공공성은 학내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중요함과 풍부함을 동시에 익힘으로써 함께 살아갈 헌법적 질서인 민주공화국의 심리적 지적 정서적 토대를 형성한다. 이를 민주적 공공성으로 칭할 수 있다.

이 시민성 형성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인격을 형성하는 독립적 자기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성찰과 타인존중의 과정이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자기존중과 타인존중, 상호존중이 공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이 분단시대와 체제가 경험한 전쟁의 아픔과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함을 익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워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중등단계에서부터는 국가와 학교는 학습의 과정에서 개인들의 진로경로를 진지하고 다양하게 탐색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전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자질과 재능이 사회적 소명과 연결되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우호적인 노동시장제도와 사회제도적 환경이 필요하지만,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의 핵심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실행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학교와 국가는 개인들의 인생계획 실현을 돕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나 인문계열 고등학교나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선택과 개방적인 이동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환경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제도와 환경을 잘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적 사회적 관계와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형성과 자기진로 탐색, 지역·국가·세계의 민주주의 시민성,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 사회적 포용의 시민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3.1운동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지역과 문화에 속한 우리 선조들은 독립과 자유, 책임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3.1운동 100주년에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교육을 설계하자.

# 포용국가에서 고등교육의 방향과 과제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 포용국가와 고등교육

포용국가란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직장과 소득이 제공되는 사회, 노인들에게 충실한 노후보장이 제공되는 사회, 불평등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를 가진 국가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다수의 노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펴는 국가(성경룡 외, 2017: 6)를 말한다. 포용국가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 경쟁모델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 —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사회와 대학의 위기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받아들인 것은 김영삼 정부부터였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졌다.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 사회는 더욱더 빠르게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



고등교육도 시장과 경쟁논리에 의해 지배당했다. 대학마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서열화되었고, 대학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대학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경쟁과 효율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학문의 자율성을 수호해야 할 총장들도 CEO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진리로 자유로워지기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사람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대학경영 풍토가 확산되었다. 지속적인 학문연구와 책임 있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규교수직을 줄이고 단기계약직의 비정규교수직을 늘리고 있다(김영, 2014. 10: 7). 대학에서는 질 낮은 교육, 부모지갑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계속되는 사학기관에서의 비리와 권한남용은 단골메뉴가 되었다.

### —— 시장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의 수용과 폐해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교육영역에서도 일반적 흐름이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흐름이 변화한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재정위기 타개책으로서 고등교육을 민영화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영역에서 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평가를 통한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들이었다(임재홍 외, 2016: 26-39).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정책은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부실부패대학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부실만 초래했다.

대학자율화정책은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정책, 사립대학에 대한 탈규제, 상업화를 내용으로 했다. 이 정책으로 국립대의 등록금만 폭등했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출현하지는 않았다.

위 두 정책이 실패하고 난 후 도입된 제도가 인위적인 경쟁강요정책으로써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정책이다. 대학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 그리고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정책은 완전경쟁 시장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시장화정책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평가의 문제, 평가기관 자체의 비경쟁성 등으로 인한 정부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의 확장

이런 사회와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의 범위를 고등교육까지 확장시키고,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공교육이란 국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경비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사회에서의 경쟁 이전에 적어도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경쟁원리를 배제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약에 교육이 사회적 기득권을 인정한 채 경쟁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교육은 이미 형성된 계급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고 단지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의무무상교육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즉 공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유치원과 대학을 제외하고는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전혀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경쟁교육으로 변질된 초·중등교육, 대학입시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천문학적 사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공교육은 붕괴되고 오로지 사교육이 우리 사회를 뒤덮어버린 느낌이다. 공교육의 확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도 공교육범주에 포함시키고 대학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 법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교육목표로 선언한 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등이 대표적인 법규범일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대학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협의로 “공교육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80%가 사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고, 전체고등교육기관 수의 85%가 사립이다. 사립대학위주로 고등교육의 체제가 굳어져 버렸다.

일반 국민들도 고등교육을 사유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전쟁 중 대학에 입학하면 군입대 유예의 특전이 부여되었다. 그 결과 입시 자율권이 빌미가 되어 대학에서 부정입학과 부적격자 입학이 성행했다. 70년대 대기업 입사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특권처럼 비추어졌다. 80년대 들어서는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이 극심해졌다. 고등교육을 공공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고등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 중에는 개인이 누리는 사적 이익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얻는 공적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은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고등교육은 다양한 종류와 막대한 규모의 외부효과 즉 건강개선, 빈곤의 감소, 소득 배분의 개선, 범죄 감소,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만들어낸다. 프랑스인들은 고등교육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확보 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대를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sup>1)</sup>의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실한 고등교육’에도 불구하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국공립대학위주의 체제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부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립대학 중 상당수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대학체제개편

우리나라의 대학은 ‘SKY(서울대-고대-연대) → 수도권대학 → 지방국립대학 → 지방사립대학 → 전문대’로 이어지는 서열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대학서열체제가 심각한 미국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의 형성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더불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과중한 입시 중심의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로 신음하고 있다.

1)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 대학분류 체계인 정부책임형 사립대학(Government-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의 개념을 우리 방식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또한 서열화로 인해 학교는 영·수·국 위주의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여도 입시경쟁의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대학서열체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또한 대학 서열체제의 해체 없이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국공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정책과 같은 대학체제 개편이 성공한다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어느 대학에 가도 큰 불만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의 경쟁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럴 때 창의적인 초·중등교육도 가능해진다.

### ——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의 길

교육이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치부되어서는 포용사회로 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했던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지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경비를 사회가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자리 잡게 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성경룡 외(2017),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1세기북스  
 김영(2014.10), "불평등 논의에 관한 단상",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혁명(창간준비2호).  
 임재홍 외(2016),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보고서.





#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

## 2019 교육부 주요 정책 방향

주명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사업 및 정책 제안

손찬희(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성미(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 2019 교육부 주요 정책 방향

주명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 키워드로 여겨지는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화 및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면서, 현시점에서 양극화, 불평등 등 국민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삼고,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9년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시작으로 행복한 출발선 보장,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2019 교육부 정책방향

### 1.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비리 척결 없이는 교육 혁신이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권한은 내려놓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월 1일 전담조직으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사립학교와 유착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도입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과 자녀의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안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평가 관리를 할 계획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입학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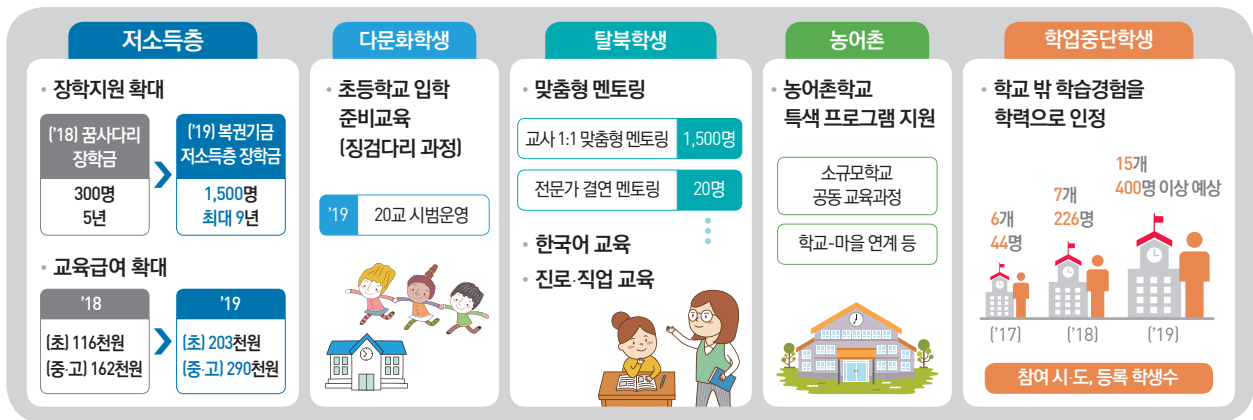
또한,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비위당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 부정·비리 문제를

척결하여,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2. 행복한 출발선 보장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2019년 교육부는 행복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2019년 국·공립 유치원을 1,080개 학급 신설하고,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교육 내용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부모가 보내고 싶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을 받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 수학, 영어의 기초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며, 각 단계별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전국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유치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유아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이룰 것이다.



•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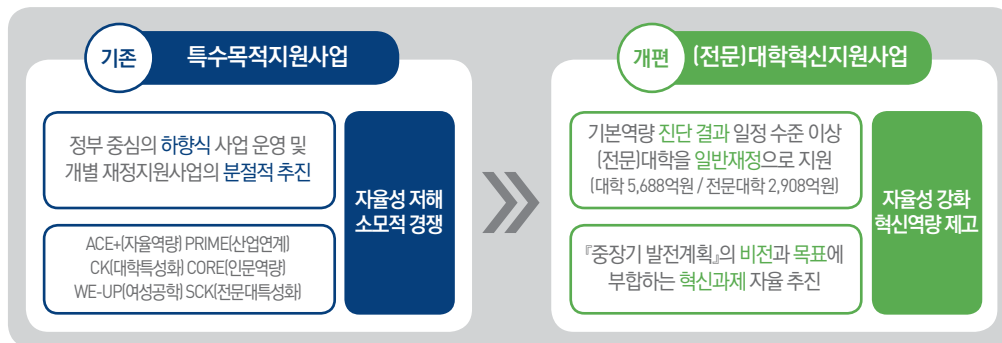
### 3. 미래사회 대비 학교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 기존 학교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창의·감성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STEAM, SW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예술 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 4.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의 대학 혁신

대학을 지식창출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대 포함, 전체 약 8,500억이 투입되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20개교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학술발전 1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7)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5.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모든 학생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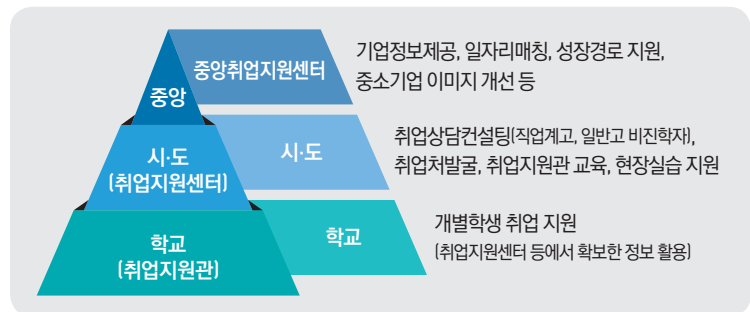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18년 105개교→'19년 354개교)하여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20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특히 올 2월 구성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 명으로 전국단위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6. 고졸 취업 활성화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또 원할 때는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할 것이다. 미래 산업과 연계한 학과로 개편하고,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교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직업계고를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 계획이다. 우수한 고졸 일자리를 늘리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한편,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하며, 고졸 취업자가 재직 중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가 더욱 부담 없이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시·도-학교 간 취업 지원 체계 강화 ●

### — 맺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이다. 교육부는 2019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되도록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사업 및 정책 제안

손찬희(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성미(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산하의 디지털교육연구센터<sup>1)</sup>는 ‘디지털교육’을 통해 성인학습자는 물론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74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와 운영으로 시작한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2013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와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방송·정보통신 수업 기반의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 취득을 위한 ‘두 번째’ 기회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던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령기 학생의 보편적인 학습권과 교과 선택권 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육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와 운영에서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지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2018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 ‘디지털교육연구센터’로 변경함.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더불어, 국가의 전반적 정책 기조인 ‘포용 전략’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생 한명 한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지원의 필요성 차원에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국가 교육정책 연구기관에 속한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가지는 책임감 역시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을 소개하고, 미래의 학교 교육을 보완, 나아가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 측면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정책 사업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정책 사업은 주 교육 대상자에 따라 6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고등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이다. 각 정책 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은 1974년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와 2013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 운영을 포함하며, 중등학력 미만의 성인 학습자는 물론, 학업중단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중·고등학교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로 발생한 전·편입 학생의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과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방송중·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복수의 학교 간에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면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가지는 학교 간 수업시간 조정, 학생 이동 간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다. 넷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병원학교를 통한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교과 콘텐츠를 혼합(blended)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2017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선수 e-school은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역시 교과 콘텐츠를 통한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여섯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심의·지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학교밖 학생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심의·지정과 학력인정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특징 및 현황을 도입 시기, 정책 대상, 정책 목표, 학생 현황, 교육부 담당 부서, 콘텐츠, 교수학습방법 측면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표 1>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정책 사업 현황 요약 ◦

구분	방송중·고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도입 시기	• 1974년(고) • 2013년(중)	• 2012년 2학기(고) • 2015년 2학기(중)	• 2017(사업 시작) • 2018년(시범운영 시작)	• 2006년(3개 시도, 민간) • 2016년(KEDI) (2017년 운영시작)	• 2015년	• 2017년
정책 대상	• 학령기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중·고)	• 정규학교 학생(중·고)	• 정규학교 학생(고)	•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중·고) ※ 초등학교 단계 운영 기반 구축 <sup>1)</sup>	• 학생 선수 (중·고)	•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초·중) ※ 고등학교급 제외
정책 목표	• 학교교육 기획 제공	• 미이수 해소 • 교과선택권 확대	• 교과선택권 확대	• 학습권 보장 유급 방지	• 수업결손 보충	• 수업인정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생 현황 (18기준)	• 고: 43교, 9,881명 • 중: 23교, 4,476명	• 고: 696교, 6,984명 • 중: 607교, 4,868명	• 개설학교 19교 • 수강학생 414명 (등록기준)	• 고: 180명 • 중: 158명	• 고: 1,167교, 22,406명 • 중: 1,805교, 24,927명	• 중: 25명
교육부 담당	• 교육기획보장과	• 이러닝과	• 교육과정정책과	• 특수교육정책과	•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기획보장과
콘텐츠	•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 콘텐츠	• 방송중·고 콘텐츠 활용	• 교사 수업	• 방송중·고 콘텐츠 활용 • 교과·담임교사 개발 콘텐츠	• 방송중·고 콘텐츠 활용	• 방송중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 방법	• 동영상(강의식)수업 + 출석수업	• 동영상(강의식)수업 + 출석수업 • 과제	• 실시간 화상수업	• 동영상(강의식) 수업 • 실시간 화상수업	• 동영상(강의식) 수업	• 동영상(강의식)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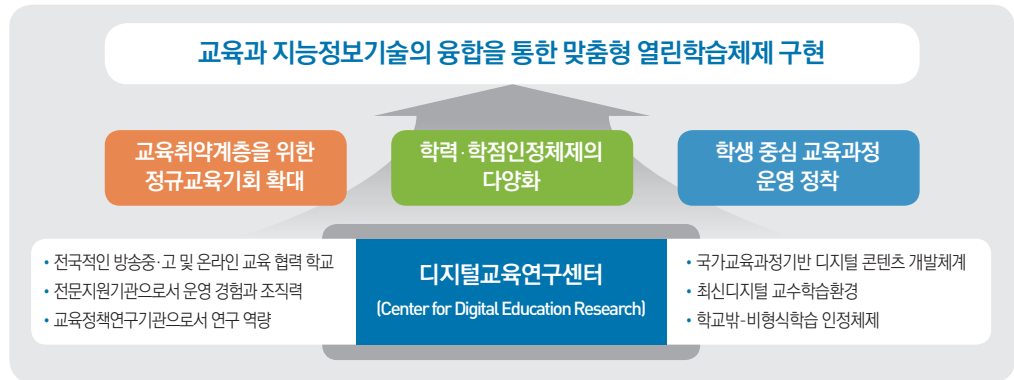
\*자료: 정광희 외(2018:92-94)<sup>2)</sup> <표 III-12>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함.

### —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지향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방송중·고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축적한 디지털교육 콘텐츠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중등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학습자 그룹의 학습권과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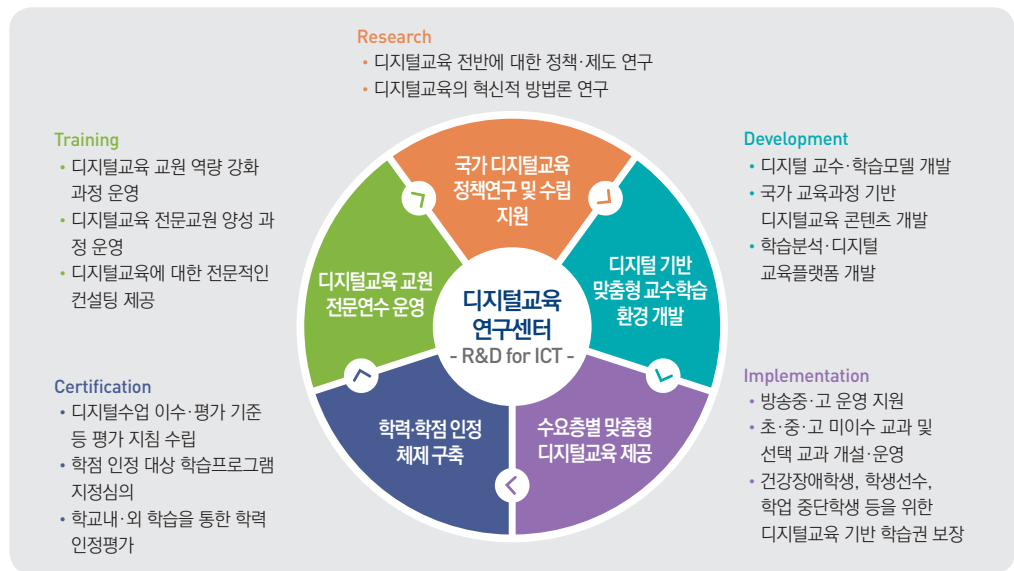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교육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체제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 아래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정규교육기회 제공, 학력·학점인정체제의 다양화,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비전과 목표의 추구는 그동안 디지털교육 기반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된 학교 현장과의 네트워크, 교육연구기관 및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와 더불어, 국가 교육과정 기반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체계와 디지털 교수학습환경 확보, 그리고 학교·비형식학습 인정체제 운영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하다.

2) 정광희, 장혜승, 손찬희, 김은영, 서재영, 이쌍철, 조영환, 남창우(2018).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1]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비전 및 목표 •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며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R&D for ICT’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디지털교육 정책 연구 및 수립 지원(Research)으로, 디지털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연구와 디지털교육의 혁신적 방법론 연구를 포함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환경 개발(Development)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교수학습모델 개발, 국가 교육과정 기반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학습분석·디지털교육플랫폼 개발이 포함된다. 셋째, 수요층별 맞춤형 디지털교육 제공(Implementation)으로, 방송중·고 운영 지원, 초·중·고 미이수 교과 및 선택교과 개설 및 운영, 그리고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학업중단학생 등에게 디지털교육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력·학점인정체제(Certification)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디지털수업 이수·평가 기준 등 평가 지침 수립, 학점 인정 대상 학습프로그램 심의 및 지정, 학교내·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평가가 포함된다. 다섯째, 디지털교육 교원 전문연수 운영(Training)으로, 교원의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그림 2]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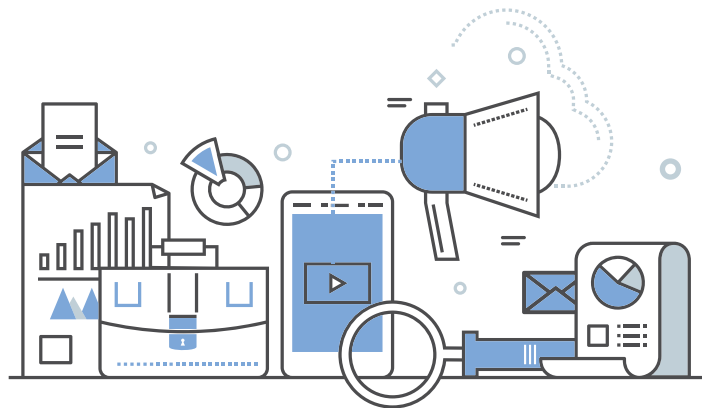
## — 디지털교육 정책 과제 제안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여러 정책 사업들은 각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각 정책 사업 간에 소위 ‘시너지(synergy)’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여기서는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적 디지털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교육 정책 사업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교육 정책 사업은 방송중·고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동영상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학생선수 e-school,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으로 이어져 왔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이러한 일방향적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으로 도입되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정책 사업이 이와 같이 확대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런데 각 정책 사업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작되기보다는 다소 단편적인 교육 목표와 교육 대상에 따라 각기 추진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수업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고등학교 학생의 선택교과 개설 확대라는 교육적 목적은 공유한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 활용되는 실시간 화상수업 시스템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그것과 닮아있다. 이처럼 각 정책 사업 간에는 서로 연계하거나 통합할 요소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교육 정책 사업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의 정책 사업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통합의 중심이 어느 부서 또는 과이어야 하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별적인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정책 사업 추진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 사업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위상을 가진 중앙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여러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 지원에 있어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온라인수업으로 개설된 과목의 평가 및 이수 기준,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디지털교육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가 중요하며, 이에 걸맞은 법적 위상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디지털학교 설립, 아니 최소한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제안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알려진 미네르바스쿨(Minerva School)을 벤치마킹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실시간 화상수업)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미네르바스쿨에서 우선으로 벤치마킹할 부분은 캠퍼스 없이 운영되는 ‘학교체제’이다. 미네르바스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다고 도입한 것은 정작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르바스쿨처럼 캠퍼스 없는 대학이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비단 대학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도 해당된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사이버학교 또는 온라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학교 유형이기도 하면서 기존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디지털학교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NEW

# 교육 연구

---

## 평가공학 기반 학습분석

최재화(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 평가공학 기반 학습분석

최재화(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등의 발달로 지능화/자동화 (Intelligence/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교육 분야 또한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글에서 저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평가공학 (Assessment Engineering)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AE의 중요한 영역인 자동문항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 기법을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에 접목하는 방안을 소개하여 평가공학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 평가공학이란?

정의: 평가공학(Assessment Engineering)은 다양한 측정-통계 분석 도구들과 ICT를 통합하여 평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평가 관련 정보 및 서비스”란 K12 교육, 고등교육,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측정, 진단, 그리고 예측에 관한 정보들과 이에 관련한 도구와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용도: 평가공학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용도로는, 평가 관련 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이 정보에 대한 활용, 이해, 사용, 및 예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분석목적”이 있다. 둘째 용도로는, 학교, 학원, 기업 등의 기관에서 최첨단 평가공학 기법과 ICT를 융합하여 평가서비스를 개발 및 발전시키는 “개발 목적”이 있다.

역사: 평가공학의 효시는 ICT가 태동하던 1970년대부터 기존 교육통계(Educational Statistics)와 교육심리측정(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CBT) 혹은 컴퓨터대응 시험(Computer-adaptive Test: CAT)이라 할 수 있다. 이 CBT와 CAT의 활용이 널리 퍼진 것은 1990년대인데, 이 시기에 ICT 특히 인터넷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하여 CBT, CAT, 그리고 인터넷기반 시험 (Internet Based Test: iBT)의 효용성이 점차 검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평가공학 기법과 기술들이 개발 및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단위 표준시험(Large-scale Standardized Test)이 2019년 현재 CBT 혹은 iBT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대에는 발전하는 ICT를 활용하여 기존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 위주의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평가공학은 이전과는 몇 가지 다른 목표들을 지향하게 된다.

학문적 배경: 평가공학은 심리, 교육, 응용통계, 응용전산 등이 어우러진 융합학문이다. 평가공학에는 전통적인 분야인 CBT, CAT, 혹은 iBT 이외에서도 자동문항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 AIG), 자동채점(Automatic Scoring) 등과 같은 많은 세부 분야가 있으며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도 한 갈래로 여겨진다. 평가공학은 측정평가(Psychometrics)를 학문의 뿌리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리통계적 접근을 넘어서 ICT 융합 및 활용을 주된 관심으로 하는 측정평가의 새로운 세부 분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평가관련 모델링과 분석(Modeling and Analysis)을 주된 관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위주의 기존의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과는 차이점이 있다. 평가공학의 이론적 특성(Theoretical Characteristics)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타당성 제고:** 평가공학의 이론적인 목표중 하나는 평가 제작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성이 높아 비과학적인 평가 제작을 보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여 평가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가공학은 다양한 과학기술을 측정평가에 접목하여 구인 명세 (Construct Representation)와 구인 보존 (Construct Preservation)을 향상하는 것을 추구한다.

**2) 인지과학의 통합:** 평가공학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인지과학을 평가시스템에 구현하고 통합하려 한다. 평가공학에서는 평가의 결과 (응답 데이터)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응답자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고 사고 과정을 고려하여 학습 정보가 뇌 속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저장되고 응답하는 지를 고려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성: 평가공학은 기존 평가의 가치들(예를 들어, 타당성과 공평성 등)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 지능화/자동화(Intelligence/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 등이 극대화된 평가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평가 및 평가 시스템은 지필평가(Paper-pencil Assessment)를 기본 형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평가제작은 문서제작(쓰기와 그리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시행의 기본 형태 또한 평가지를 읽고 응답(선택 혹은 구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ICT가 상당히 발달한 지금도 대부분의 CBT 혹은 iBT 평가는 전통적인 지필평가 형태로 제작하여 이를 컴퓨터를 단말기로 Internet을 통해 전달(deliver)을 주된 형태로 한다. 하지만 평가공학은 평가 도구 및 시스템의 제작, 검증, 사용, 분석, 그리고 관리와 같은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 Internet 환경에 이루어지는 Assessment on Internet(Aoi)를 지향한다. 따라서 평가공학의 지향점은 기존의 접근방법들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적 특성과 실제적 특성들로 나눌 수 있다.

## — 기술적 특성

**1) 디지털 평가(Digital Assessment):** 평가공학은 지필평가를 전산화하는 것을 넘어서 AoI에서의 디지털 평가를 지향한다. 디지털 평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선 평가 혹은 평가문항을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며, 평가 개발의 주된 과정은 코딩(coding)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평가공학의 자동문항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에서는 평가문항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다수의 변형 문항을 생성하는 문항모델(Item Model)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평가제작의 기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요소(3D, animation, sounds)들을 평가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디지털화된 문항 혹은 평가도구는 디지털화된 채점, 분석, 및 관리와 같은 평가요소들과 융합된다. 즉, 평가공학은 평가의 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요소와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통합됨을 지향한다.

**2) 자동화 혹은 지능화(Automation/Intelligence):** 평가공학이 추구하는 주된 트렌드는 사람 위주의 평가업무의 자동화 혹은 지능화이다. 문항제작(Item Development), 평가구성(Assessment Assembly), 측정모델 선택(Measurement Model Selection), 채점(Scoring and Grading), 피드백 및 보고서 생성(Feedback and Report Generation), 평가분석(Assessment Analysis) 등 평가공정 전반에 걸쳐 자동화 혹은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이 평가공학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자동화와 지능화가 진행되어 나갈수록, 평가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한계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3) 평가 플랫폼(Assessment Platform):** 기존 평가시스템과 대비되는 AE 시스템의 특징은 개별적인 평가서비스에서 평가플랫폼(Assessment Platform)으로의 전환이다. 평가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상호 연결되어 평가 관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평가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평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평가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요구형(On-demand) 평가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평가(Ubiquitous Assessment)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 — 실제적 특성 (Practical Characteristics)

**4) 개별화(Individualizing or Tailoring):** 평가공학은 기존의 단일 혹은 집단별 평가서비스와는 달리 개인의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개인별 평가를 목표로 한다. 평가공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차로 인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평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특히 개별화에 따르는 인적 그리고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화의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지능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5) 학습자 중심 평가(Learner-centered Assessment):** 평가공학은 관리자 위주의 종합평가(Summative Assessment)보다 학습자 위주의 진단/형성평가를 지향한다. 특히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즉각적인 (Immediate) 평가정보 분석과 피드백 제공을 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의 종합평가 위주의 평가환경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평가공학은 교사권한평가(TEA: Teacher Empowered Assessment) framework와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교실 내 평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6) 일체화(Alignment):** 평가공학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과정(Curriculum), 교수(Instruction), 및 평가(Assessment) 교육 3요소의 일체화 정도를 고도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oT(Assessments on Textbook), 즉 디지털 교과서 속에 평가시스템을 융합하여 과정/교수와 과정/평가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일체화를 지향하는 평가공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Stealth Assessment 혹은 Game-based Assessment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평가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일체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공학의 예라 할 수 있다.

## — 학습분석에서의 평가공학의 역할 및 제언

평가공학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학습분석이란 학습과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이를 해석 및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나열한 평가공학의 이론적, 기술적, 실제적 특성들 모두는 학습분석이 성공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평가공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학습분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측정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에는 자동문항생성 혹은 자동채점과 같은 평가공학 시스템들은 학습분석 시스템 내부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다양한 평가공학의 기술분야도 학습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평가공학의 발달은 학습분석과 같은 평가서비스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하여 기존 평가 혹은 측정 관련한 산업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대하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간의 패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인간 대 기계’ 대결로 보아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의한 인간(예를 들어 선생님 혹은 문항 개발자)의 대체라 보기 보다는,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고, 더욱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고 보는 편이 옳다. 예를 들어 ‘평가공학을 이용하여 학습분석이 발전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등의 사회적 이해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학습 과정과 저차원적인 학습 영역의 학습분석에서 자동화 혹은 기계화를 이루어서 고차원적인 영역에서의 선생님 역할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가공학 분야 연구자들은 평가공학으로 증진되는 평가 과정(process)의 과학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이로 인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향상됨을 주지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공학의 요소가 학습분석에 활용되어, 학습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 플랫폼 혹은 학습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활발해질수록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평가서비스의 민주화의 도구라고 믿었던 첨단기술은 동시에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대중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정치적 리더, 특히 평가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한국은 최첨단기술 인프라에 비해 평가공학의 학문적 그리고 산업적 환경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열악하다. 예를 들어, 모든 표준평가가 CBT 혹은 CAT 형태로 제공되는 미국에 반하여 한국내의 CBT/CAT 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교육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종이위주의 시험에서 탈피하고, CAT 혹은 자동문항생성과 같은 평가공학 서비스를 적극 도입 및 장려하여 평가공학 산업과 인력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Note: '제언'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Choi, J. (2017). Introduction to Assessment Engineering. Assessment,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cal Report Ser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에서 발췌/번역된 내용입니다. 영어원문과 지면상 생략된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저자(최재화: jaechoi@gwu.edu)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의 교육

---

## 네덜란드의 교육 형평성

정현숙(「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미래

이상은(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연구위원)





# 네덜란드의 교육 형평성

정현숙(『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 네덜란드 교육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며 교육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신이 노력만 하면 어느 길이든지, 중간에 학교도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다. 또한 공부를 못해도 기죽지 않는 교육이면서 공부를 잘 한 학생만이 대접받지 않는 풍토이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1년 동안 대학진학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어디 그뿐인가?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들은 중학생 나이인 13살부터 직업학교 교육을 통해 일찍이 전문 직업인 교육을 받아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시스템이 네덜란드 교육의 강점이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지 않는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 노력한다. 바로 이 학생들이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곳이 학교이며 공교육이다.



## —— 유치원교육-공교육이 인성까지 책임진다

네덜란드 아이들은 만 4살이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에 들어간다.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 과정이 공교육으로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초등학교는 유치원과정(Groep1-2)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제가 8년제(Groep1-8)이다. 이 같은 병설유치원은 네덜란드 모든 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교 선택은 부모와 학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가 원하는 곳이면 사는 구역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 필자는 네덜란드 유학 시절 늦둥이 딸을 집 근처 몇 개 학교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 가능한 초등학교(morgenster Kampen)에 보냈다. 네덜란드 초·중·고등학교는 보통학교와 종교교육이 가능한 기독교, 카톨릭 학교 등으로 다양하다. 이 때문에 부모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학교에 따라 교육의 차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유치원 사교육열풍은 찾아볼 수도 없다. 유치원 교육은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교육 현장인 만큼,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생활의 기초교육을 중점으로 가르친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 양보하는 법, 친구를 도와주는 것,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작업, 인내하는 법, 교통 질서교육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 생활방식을 배우게 된다. 유치원에서 글자나 숫자 등은 전혀 배우지 않는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읽어주는 책을 열심히 듣는 훈련을 한다. 한국처럼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유치원은 국어도 수학도 배우지 않는데 1년 과정이 끝나면 리포트(성적표)가 나온다. 이 리포트는 교사가 일 년 동안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기록한 것이다. 이 리포트 결과에 따라 유급이 결정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필자 앞집에 사는 라몬(lamon, 4살이라는 아이가 유급을 직접 당해서 알 수 있었다. 유급이라는 말에 필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유치원 아이를 유급시킬 수 있을까? 기가 막혔다. 그런데 라몬 엄마는 이미 네덜란드 교육시스템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담담히 받아들였다. 유급된 아이들은 groep2로 올라가지 못하고 groep1학년을 한 번 더 다녀야 한다. 유치원과정에서 유급된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양보, 협동, 인내도 못 하고 자기만 아는 고집쟁이 아이들이 주류를 이룬다. 학교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급과정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더 노력해 아이의 인성과 성품을 바꾸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네덜란드 유치원 2년 과정은 어찌 보면 공교육이 아이의 인성교육에 얼마나 치중하고 책임감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치원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groep3, 초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 —— 초등학교-책가방이 없다. 즐기며 공부한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교과서는 학교에서만 볼 수 있고 집에 가져올 수 없다. 유학 시절 필자는 처음에 책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외국인이라서 책을 가져오면 복습이나 예습을 시켜서 네덜란드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공부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왜 책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했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교사가 책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서 믿을 수 없어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났다. 교사의 대답은, “교과서 공부는 학교에서 충분하다. 집에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다. 집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다양한 다른 체험활동을 하고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더 많이 하라”고 권했다. 우리가 외국인인 점을 강조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한다.”며 교과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더니 “교사와 10분 면담” 시간에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에게 ‘교사와의 10분 면담’ 시간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이의 노트나 워크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성적 등도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와의 10분 면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 이 면담 시간은 또한 리포트(성적표)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성적표를 보아도 이미 교사와의 만남에서 다 설명을 들었기에 자녀의 성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과정 역시 유급이 있고 또한 월반이 가능하다. 각 과목 평균성적이 6점 이하이면 유급이지만 8점 이상이면 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월반도 가능한 것이 네덜란드 교육과정의 장점이다. 유급과 월반은 성과와 학교에서 태도에 따라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교사와 10분 면담’은 1년에 4차례 갖는다. 주로 부모들이 퇴근한 밤에 이루어지는데,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심지어 이혼한 부모들까지 이 시간은 서로 만나서 자녀의 학업 태도와 결과를 교사에게 귀담아들음 만큼 아주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덜란드 초등교육은 가정에서 예습. 복습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고 즐기며 다니는 과정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엄밀하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학생의 성적이나 태도 평가결과가 나중 어떤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한 학년에 4차례에 걸쳐 리포트(성적표)를 만들고 부모와 면담에서 미리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적으로 공부를 잘 해내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게 된다. 물론 중·고등학교 진학은 초등학교 8년 과정 성과와 졸업 전에 국가에서 시토시험(CITO-중·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로 결정된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미리 준비하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평소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언어, 수리, 상식, 지능지수 등을 테스트한다. 이 시험결과에서 학생이 어떤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야 적성이 맞는지 정확히 나온다. 교사들은 시토시험 결과와 학생의 8년간 초등학교 성적을 토대로 부모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해 중·고등학교에 진학원서를 내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문계 중·고등학교(VWO) 진학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30명 아이들 중 고작 5~6명 정도가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통학교나 중하위 직업학교로 가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처음 이 사실을 알고 한국의 부모들이라면 과연 이런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보았다. 어쩌면 중학교 입학시험을 엄청나게 잘 치르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한다거나, 자녀들을 인문계 중·고등학교가 아닌 직업학교에



보내라고 하면 거세게 반발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학교 교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판단해 절대 우기거나 반발하지 않는다. 교사의 조언에 거의 수긍하고 따라간다. 그 이유는 부모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우겨서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보낸다 하더라도 공부를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곳에서 얼마 못 가서 탈락하거나 유급될 거라는 것을 부모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초등학교 교육은 책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예습, 복습도 없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완전히 자유다. 맘껏 뛰어놀고 동네 강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오후 시간을 갖는다. 네덜란드 초등학교생들은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는 것을 아예 모른다. 사교육 학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를 더 배울 수 있는 곳은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뮤직스쿨이나 각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교육과정이다. 이런 곳에서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배운다. 네덜란드 초등학교 과정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학부모들에게도 심어져 있어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공부하라고 권하는 부모들도 없다. 필자의 아이들도 네덜란드 초등학교 시절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수영장가고 축구하고 노는 시간에 빠져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는지, 지금도 한국에 오면 “왜 한국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마음껏 놀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원은 왜 가야하는지” 등 네덜란드식 사고로 필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 — 중·고등학교-대학진학인가? 직업 준비인가? 같길이다르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생들은 같은 또래 나이인데도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길이 서로 많이 다르다. 네덜란드는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과정으로 학제가 학교에 따라 4년, 5년, 6년제로 크게 나뉜다.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VWO)는 6년제, (Klas1-6)로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공부를 좋아하고 즐겨했던 학생들이 가는 학교이며, 초등학교 졸업자의 15~20%만이 진학한다. 물론 타고난 지적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초등학교 졸업 전 보는 국가시험(cito)결과 지적인 능력(IQ),수리, 언어, 상식 등에서 뛰어난 점수를 얻은 데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필자는 아이들이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웃지 못 할

추억이 있다. 개학했는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학교에서, 온종일 놀고만 온다는 것이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는 섞여 있으니 마치 대학초년생처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지기,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기 시간 관리하는 법 등을 듣고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인문계 중·고등학교도 초등학교처럼 놀기만 하는것인지 의아해 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날 아이들이 들고 온 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 장난이 아니었다. 언어과목만 해도,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여기에 라틴어까지 5개나 되고, 수학 등 각 과목이 15개가 넘었다. 물론 시간표는 대학처럼 자유롭게 수강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인문계 중·고 교육과정은 예습이나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엄청 많았다. 물론 머리 좋은 아이들이 모인 학교이지만 매일 쏟아지는 과제물과 쪽지시험 구두시험 등이 얼마나 많은지 초등학교 내내 놀기에 달인이었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갑자기 너무나 버거운 교육과정이었다. 필자는 두 아들을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보낸 경험이 있어서 옆에서 더 잘 지켜볼 수 있었다. 밥 먹을 시간을 잊을 만큼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놀고 들어와서도 아이들 방에 가보면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 이유는 공부하지 않으면 과목별로 유급을 당하고 3과목 이상 유급이 나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하므로 악착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언어과목은 구두시험, 단어시험을 자주 봐야했기에 형과 동생은 서로 자기를 시험 볼 것을 점검해주고 서로 물어봐주며 시험을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곤 했다. 이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 과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조차도 정말 감당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대학(WO-학문연구중심)진학이 목표인 만큼 대학에 들어가기 전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Klas3(중3)학년 말이 되면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분야 전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선택에 관련된 설문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사 결과와 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배운 과목에 대한 흥미도 등을 교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분야를 공부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이것을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문과는 C&M(문화와 정치) E&M(경제와 경영), 이과의 경우 N&G(자연과 건강) N&T(자연과 기술)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앞으로 남은 3년(Klas4-6) 동안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대학진학을 준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연과 건강분야(N&G)를 선택한 학생들은 생물이나 물리, 수학, 화학 등을 더 많이 공부하는 대신 불필요한

과목은 덜어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분야를 선택해 3년 동안 공부했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시 아주 유리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자연과 건강(N&G)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가능하며 공대에 갈 경우, 자연과 기술(N&T)분야를 이수해야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위보통직업중·고등학교(Havo)로 5년제이다. 이 학교는 학문연구중심 대학(WO)보다는 실무중심 대학(HBO)의 상위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20~30% 학생이 진학한다. 상위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문계 교육과정과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 템포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며 라틴어 등 고전어는 공부하지 않고 수학이나 영어의 수준도 약간 낮은 등급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이들 학생들도 3학년 말에 인문계 학생들처럼 4개의 프로필을 선택해 준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 하위 직업중·고등학교(Vmbo)로 4년제이다.

이 학교는 중하위 직업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일찍부터 직업세계에 뛰어들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중하위 직업중·고등학교는 그 안에서도 이론중심인지, 실무와 이론을 겸한 과정인지, 단순 직업과정인지로 나누어져, 학생들은 13살 어린나이부터 자신의 직업과정을 선택해 실제적인 경험을 쌓으며 공부하는 과정이다.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 과정은 크게 프로필이 기술·경영, 요양·복지, 농축산업 등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집중 공부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학교에 다니면서 바로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아서 미래의 직업 세계를 구축해 간다.

이 같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는 학교마다 유급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년마다 평균점수가 6점 이하이면 한 학년이 유급되고, 유급이 두 번 반복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된다.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한 단계 낮은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평균성적이 8점 이상이면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한 단계 높은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 학교들은 교육과정을 다 열어놓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다.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도 달라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졸업 전 국가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Eindexamen)을 치른다. 어떤 과정을 마쳤느냐에 따라 학문중심의 대학(WO)이나 상위권 실무 중심대학(HBO), 중하위권 전문대(MBO)로 가느냐로

정해진다. 국가에서 치르는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대학진학과 연결된다. 물론 일부 인기학과는 추첨이나 면접으로 결정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입학이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에 네덜란드 교육의 강점은 낙오된 자를 배려하는 교육의 형평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졸업시험 합격률이 90%에 이르지만, 탈락하는 10% 미만 학생들을 위해 1년 동안 탈락한 과목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Vavo)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물론 3과목 이상 탈락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다닌 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낙오된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해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네덜란드 대학 - 졸업 어렵다, 대학서열 없다

네덜란드 대학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대학의 서열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마다 유명한 학과가 있을 뿐이다. 네덜란드 학문연구중심대학(WO)은 1학년 과정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유급자가 30~40%에 이른다. 대학은 공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을 언제 졸업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금기된 질문이기도 하다. 대학 역시 실무중심대학에서 학문연구 중심대학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 교육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비록 낮은 학교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높은 학교로 학교도 옮길 수 있고, 반대로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 한 단계 낮은 학교로 전학가야 한다. 여기에 네덜란드 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보다는 뒤처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교육이 큰 장점이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해서 학교가 기술을 습득하게 해줌으로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지니게 함으로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13살, 14살 어린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도로 블록공사를 돕거나 유리창을 닦는 전문가 옆에 보조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의사와 교수,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집을 지을 목수나 빵을 만드는 사람들, 생선을 파는 사람들, 도로 포장하는 사람들 등 각 자가 자기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강조하고 집에서 부모들도 강조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학 진학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문연구중심대학 진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네덜란드는 세계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된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행복해한다.

왜 네덜란드 아이들은 행복해할까? 초등학교 시절 공부 스트레스가 없고 자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 아닐까? 비록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일찍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 평생 잘 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또 다른 행복한 길이라고 여긴다. 여기에 교육의 형평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네덜란드 교육당국과 사회보장에 심혈을 기울인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공조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은 학부모들이 자녀 유치원 보내는 것부터 전쟁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너무도 힘들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힘든 교육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학부모, 학생들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 한국교육도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네덜란드 교육을 잘 거울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미래: 교육 형평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다<sup>1)</sup>

이상은(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연구위원)



## — 들어가며

최근 OECD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학교교육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에 성인이 될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이러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의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과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 말 OECD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1997-2003)를 통해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역량'을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많은 국가의 교육과정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설계 방식에

1)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연구로 수행된 '이상은 외(2018).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해당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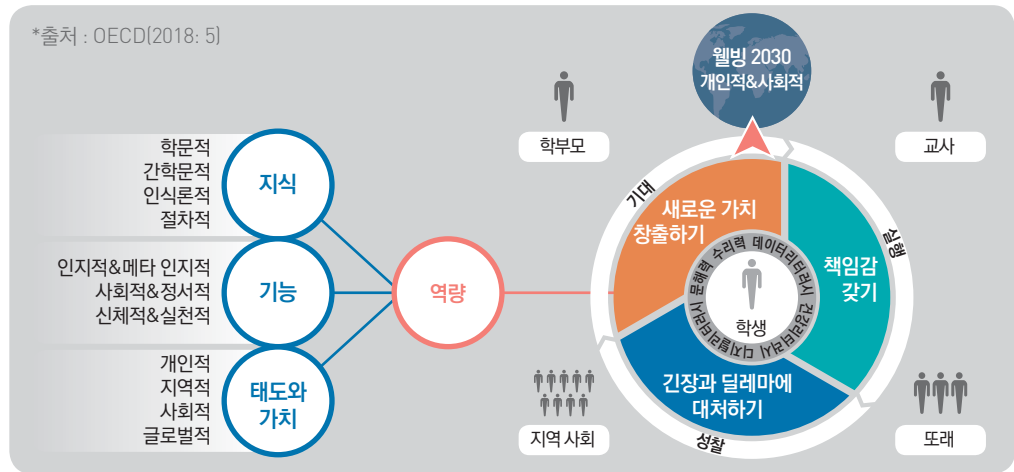
관심을 끌게 한 계기가 되었다. Education 2030은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과제로서 이전 보다 한층 더 상세하게 미래 사회의 특징, 미래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육과정 설계 원리, 학생과 교사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학생 주체성(student agency)을 중심으로 한 Education 2030의 미래 학교교육의 틀은 교육 형평성을 새롭게 생각해 볼 가능성을 열어준다.

### — OECD 'Education 2030'에 제시된 미래 학습의 청사진

최근 OECD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부제가 붙은 이 포지션 페이퍼에는 OECD가 제안하는 미래 학습의 틀이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1. 21세기 새로운 교육목표: '웰빙'(well-being)

Education 2030에서는 새로운 교육목표로서 '웰빙'에 주목한다. 이것은 이전 DeSeCo 프로젝트에서 '성공'(success)을 교육목표로 내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미래교육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과거 교육 담론을 지배해 온 '성공'이라는 메타포와 강하게 결부된 경제발전 논리를 탈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웰빙은 수입과 부, 직업과 소득,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을 갖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웰빙의 이러한 측면보다는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 더 초점을 둔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에 누구나가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OECD, 2018: 3-4).



• [그림 1] OECD Education 2030에 제시된 미래학습의 틀 •

### — 미래교육의 학생상: '학생 주체성'(student agency)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학생 주체성'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프로젝트가 보기에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가장 잘 준비가 되려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변화 주체가 될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타인들의 의도와 행동,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장·단기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교육이 학생들의 주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학생 주체성’이란 세계에 참여하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사태, 환경 등에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8: 4).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 주체성’이 함의하는 바는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와 요구, 개인적 웰빙,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있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분열보다는 협력을, 단기간의 이득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우위에 두면서 책임감 있게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주체성의 개념은 교육이 직업 세계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미래 교육과정의 새로운 역량: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곧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전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역량을 선정하 바 있으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이루는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 등 각 영역의 하위 범주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사회에 학생들이 더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다. 변혁적 역량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이다 (그림 2, <표 1> 참고).



• [그림 2] Education 2030 ‘변혁적 역량’의 범주 •

• <표 1> Education 2030 ‘변혁적 역량’의 요소 및 특징 •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특징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등에 토대를 둠	모순적이거나 양립불가능한 생각, 논리, 입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좀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려는 능력	앞의 두 역량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경험, 개인적·사회적 목표, 배우고 들은 것, 옳고 그름에 비추어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출처: OECD(2018: 5-6) 내용을 재정리함

이러한 3가지 범주의 변혁적 역량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성격상 발달적이고 학습할 수 있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변혁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성찰(reflection) → 예견(anticipation) → 행동(action)’이라는 순차적 과정을 통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본다(OECD, 2018: 6).



## — OECD 'Education 2030'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 원리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최근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때 공통으로 직면하는 5가지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① **교육과정의 과부하(curriculum overload)**: 학부모, 대학, 고용주의 필요와 요구로 인해 학교는 과도한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음. 그 결과 학생들은 핵심적인 학문 개념을 습득하거나, 균형 잡힌 삶에 관심을 두거나, 혹은 우정을 쌓기, 수면, 운동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함. 이제 학생들의 초점이 “더 많은 학습 시간”으로부터 “양질의 학습 시간”으로 전환할 때임.
- ② **시간 차(time lags)**: 교육과정 개혁은 인식, 의사결정, 실행, 효과 간의 시간 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교육과정의 의도와 학습 성과 간의 간극은 일반적으로 매우 큼.
- ③ **교육내용의 질(quality of a curriculum contents)**: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해서 더 깊은 이해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내용의 질이 높아야 함.
- ④ **교육과정의 질과 형평성 간의 조화(balance between quality and equity of curriculum)**: 교육과정은 혁신적이면서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함. 일부 선택된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함.
- 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신중한 계획 및 정합성(alignment)이 개혁의 효과적 실행에 매우 중요함.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설계의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 체제의 변화를 위한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내용 측면의 설계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과정 측면의 설계 원리’이다. 먼저 ‘내용 측면의 설계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OECD, 2018: 6-7).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이들이 가진 사전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엄격성(rigour)**: 주제는 도전적이고 깊은 사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함.

**초점(focus)**: 학생들의 학습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학년에 비교적 적은 수의 주제가 소개되어야 함. 주제들은 핵심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될 수도 있음.

**일관성(coherence)**: 주제들은 그것이 도출된 학문의 논리를 반영하도록 계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계 및 연령 수준에 따라 기초부터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함.

**정합성(alignment)**: 교육과정은 수업 및 평가 실제와 잘 정합되어야 함. 바람직한 성과의 많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측정될 수 없는 학생의 성과와 행위도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하나의 맥락에서 학습되어 다른 맥락들에 전이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선택(choice)**: 학생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주제와 프로젝트 선택지, 자신들의 주제들과 프로젝트를 제안할 기회,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한편, Education 2030 프로젝트가 제시한 ‘과정적 측면의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OECD, 2018: 7).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기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

**실제성(authenticity)**: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학습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함. 이것은 학문-기반 지식의 습득과 함께 간학문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요구함.

**상호연관성(inter-relation)**: 학습자에게 하나의 주제 혹은 개념이 어떻게 여러 학문 내 및 학문 간을 가로지르는 여러 주제나 개념들, 그리고 나아가 학교 밖의 실제 삶과 연계되고 관련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유연성(flexibility)**: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지고 정적인” 것으로부터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함. 학교와 교사들은 개인의 학습 필요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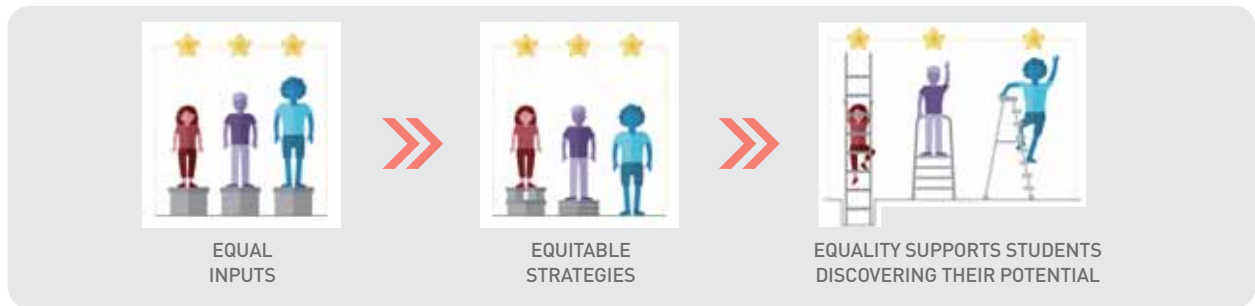
**참여(engagement)**: 교사, 학생,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초기부터 관여해야 함. 즉 더욱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실행은 교사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 내용에 친숙할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음.

## — 새로운 교육 형평성을 지향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미래교육의 새 지평을 그려보고자 하는 국제적 수준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OECD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로 형평성을 강조한다. 비록 이 프로젝트에서는 추구하는 형평성의 성격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의 생태계 변화상과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부터 교육 형평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정책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양상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해 오고 있다(CompetencyWorks, 2017). (그림 3 참고) 1단계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기회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학습 결과에서는 여전히 계층 격차가 나타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2단계는 학습 '결과'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을 마칠 때 동일한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추구하는 형평성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교육 형평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단계의 형평성은 무엇보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고정된 틀의 학교교육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OECD Education 2030에서 미래 학교교육의 핵심으로 '학생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되는 제3의 형평성은 보다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경로는 학생마다 다르게 설계된다. 교육정책에서 동일한 출발선과 동일한 종착지를 기준으로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그림 3] 교육 형평성의 3 단계 진화 •

\*출처: CompetencyWorks(2017: 5)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한편으로는 '학생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 원리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미래의 학교교육을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추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습과 교육 형평성의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학교교육의 문화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이상은, 김은영, 김소아, 유예림, 최수진, 소경희(2018).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CompetencyWorks(2017). Quality and equity by design: Charting the course for the next phase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12 Online Learning(INACOL).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 교육현장 REPORT

## 학생들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송광자(충청남도교육청 파견교사)

## 무지갯빛 고운 꿈이 커가는 작은 지구촌 학교

김영미(김해합성초등학교 교사)



# 학생들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송광자(충청남도교육청 파견교사)



## — 들어가며

“Jun, what do you think about Mina’s idea?”

영준이는 지금 충남 부여의 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야간 자습을 하는 시간, 90km 떨어진 홍성 내포에서 한국인 영어 선생님과 미국인 강사가 함께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에 참여해 영어로 대화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토론도 한다. 공주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인 윤지가 전기 회로에 점등 버튼을 누르면 당진에서 아두이노 코딩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휴대폰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

이들은 모두 충남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장면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구축한 양방향 실시간 교육포털인 ‘교실온넷(www.classon.kr)’에

개설된 온라인 교실에서 진행되는 정규교육과정이다. 교사는 전용 스튜디오에서 수업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나 집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웹캠이 설치된 개별 컴퓨터로 접속해 수업을 듣는다. 모니터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발언권 부여, 화면공유, 파일공유, 그룹 토론 방, 판서, 퀴즈, 설문 조사, 채팅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제 교실과 마찬가지로 출결 확인이 가능하며, 거꾸로 수업, 대화형 수업,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 수업을 할 수 있다.

2017년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교육청에 선정된 후 하반기 흥성 내포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당진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018년 3월부터 정규교육과정 수업을 시작했다. 교사가 없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로 이동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진로 맞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항공관제사를 꿈꾸며 영어 의사소통 수업에 목말라 있던 영준이나 컴퓨터 공학도가 되기 위해 코딩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인근 지역 어디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윤지와 같은 농어촌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꿈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계

도교육청에 파견교사를 배치해 교육과정 설계, 과목 수요 조사, 강사 섭외 및 배치,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평가 시스템 안착, 매뉴얼 개발, 학사 처리 과정 체계화, 전문성 신장 연수, 교육청-학교-교사-직속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1. 학사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스튜디오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당진고등학교
운영 단위	· 학기 별 2단위(34시간) 운영
운영 시기	· 정규시간 내 권장, 평일 방과후 운영(2019년 주말까지 확대 예정)
개설 인원	· 15명 내외(온라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원)
이수 기준	·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34시간 중 23시간 이상)
평가 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른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수행평가 70% 이상, 과정평가 시행 권장
수업 운영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목표, 차시별 수업 계획, 평가 계획 안내 · 강의, 토론, 협동학습 등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미래 역량, 창의성 신장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강좌별로 현장체험학습 연계 등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평가, 발표회 운영(1회, 6시간 이상) · 토요일 활용(지필평가, 수업 중 과정평가, 실험·실습·팀 프로젝트 등)

## 2.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업무 흐름도

단계	주요내용
준비 (도교육청)	① 도교육청 운영 계획 수립 ② 개설희망 과목 수요조사 및 강사 선정 ③ 개설 확정 과목 학생 모집(최종 수강 대상자 학교에 공문 통보)
교실온달 수강신청	④ 교육 포털 회원 가입 및 학교 관리자 등록(참여학교 관리교사) ⑤ 교육 포털 교실온달(www.classon.kr) 과목개설(지도강사) ⑥ 온라인 수강신청(학생)
운영 (도교육청 거점학교)	⑦ 교과서와 수업 장비 배부, 온라인 시스템 활용 연수(도교육청) ⑧ 평가기준 심의(거점학교), 수업-평가시행(과목별 지도강사) ⑨ 평가 관련 나이스 업무(거점학교), 출결통보(도교육청→소속학교) ⑩ 운영 종료, 만족도 조사(도교육청)
보고 (거점학교)	⑪ 이수결과 통보 -이수위원회개최 및 이수 여부 심의 -성적산출 결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수결과 통보 (거점학교→소속학교)

## 3.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원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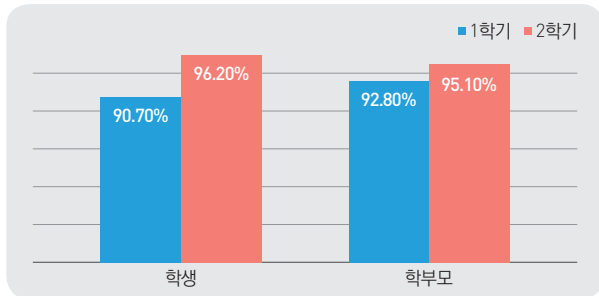
- **도교육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예산 교부, 현장지원단 조직 및 운영, 개설 희망 과목 수요조사, 개설과목 확정, 거점학교 지정, 지도 교사 선정, 연수 및 컨설팅 실시, 매뉴얼 개발·보급,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수업-평가 모니터링, 교과서 주문·배부, 출결 현황 통보, 우수 사례 확산, 만족도 조사 등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내포 스튜디오 설치, 공동교육과정 NEIS 업무 처리 매뉴얼 공동 개발, NEIS 업무 처리 방법 안내(NEIS 과목개설, 타학교 수강생 불러오기, 타학교 교원 NEIS 권한부여, 성적 처리 및 마감 등)
-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평가 계획 심의, 집합 수업-평가 장소 제공 및 운영 지원, 평가처리, 이수심의위원회 개최, 성적 자료 NEIS 전송, 이수 결과 통보
- **소속학교** 관리 교사 지정, 수업 장비(웹캠, 헤드셋) 관리, 소속학교 학생 성적 및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료 NEIS 반영 및 확인
- **지도교사** 온라인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운영, 교과세특 작성

## 4. 2018년 운영 현황

스투 디오	1학기[2018.3.28.-7.19.]					2학기[2018.9.3.-12.19.]				
	참여 학교	운영 과목	수강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참여 학교	운영과목	수강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내 포	6교	2과목	25명	20명	80%	12교	5과목	75명	65명	87%
당 진		2과목	45명	37명	82%		5과목	75명	68명	91%
총 계	6교	4과목	70명	57명	81%	12교	10과목	150명	133명	89%

-1학기 대비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참여 운영 과목수 250%, 학생수 214%, 참여학교 수 200%, 이수율 8% 증가

### 5. 2018년 운영 만족도



-1,2학기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1학기 대비 2학기 과목개설 확대, 수업 및 평가 질적 제고를 통해 만족도가 향상됨.

###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 1. 학생 요구 맞춤형 교과 개설

학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개설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참여도가 높아진다.

학기	개설 과목
1학기 (4과목)	심화영어(원어민 팀티칭),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고급지구과학, 고급물리
2학기 (10과목)	영어회화(원어민 팀티칭), 러시아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국제경제, 교육학(1학년), 교육학(2학년), 심리학(1학년), 심리학(2학년), 환경과학, 정보과학

#### 2.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맞춤형 수업-평가 모델 구안·실천과 지속적인 질적 제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더라도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외면당하고 만다. 수능 성적 향상에 최적화된 EBS 인강이 있는 상황에서 수능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이 경쟁이 되겠는가?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 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수업과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는 과정 평가 모델을 먼저 시행하고 공유하고 활동내용을 제대로 기록해 주는 문화를 조성해 갔다.

#### ◎ 원어민 팀티칭 영어회화 온라인 맞춤형 수업-평가 사례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업무 지원 파견 교사로서 수업을 직접

개설해 온라인 맞춤형 IIE 수업-평가 모델을 구안·적용해 확산했다. 1학기에 강의식 위주 수업과 지식 위주 선택형 지필평가를 시행하던 동료 교사들이 2학기에는 각 교과 특성에 맞는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 평가를 시행하고 단편적 지식 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논·서술형 문항 비중도 높아졌다.

#### ● 영어회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개요 ●

교육과정 재구성	- 국제사회문제 주제중심 재구성(세계화, 국제문제, 아동인권, 평화통일) - 인문소양 문학작품 읽기(안네프랑크, 미국 개척가 정신 관련 Short Story)
학생 참여 활동 수업	- 온라인 수업 기능을 활용해 영어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IIE 수업 구안 ※ IIE는 질문(Inquiry), 소통(Interaction), 표현(Expression) 활동 수업
과정평가	- 수행평가 70%(수업 중 말하기 쓰기 활동, 국제문제 탐구, 역할극) - 지필평가 30%(서답형 20%, 논술형 80%) 학기 중 1회 실시
기록	- 수업 참여도, 수업 활동 중 관찰한 내용을 역량의 성장 중심으로 기록 - 영어말하기쓰기 역량, 협업능력, 리더십, 참여도, 논리력, 창의력 중심 기록



#### ● IIE 영어회화 온라인 수업 흐름도 ●

● 영어회화 활동 장면 및 산출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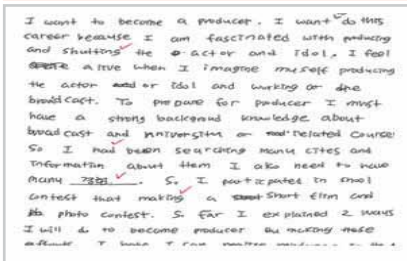
스튜디오 수업 장면



그룹 토론 장면



Learning Journal



지필평가 논술 답안



집합수업(대본 리하설)



안네프랑크 온라인 수업

- 듣고 요약하기, 찬·반 토론 후 에세이 쓰고 발표하기, 근거 있는 주장하기 등의 활동을 정례화하여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역량이 크게 신장됨

- 구글문서, Canvas.com 프로그램 활용으로 온라인 상에서 협력적 글쓰기와 협력적 프로젝트 진행 가능

◎ 아두이노 코딩 정보과학 수업 사례

실물화장기를 통해 정교한 작업 과정을 학생 개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 1:1 개별 맞춤 수업이 가능했다. 교실은 위치에 따라 교사의 작업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 수업 시연-학생 과제 수행-결과물 영상 제출이 더 적합했다는 평이다.

● 정보과학 아두이노 코딩 온라인 수업 실습 장면 ●



스튜디오 교사 시연



교사 시연에 따른 학생 수행



집에서 수업 참여

3.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과 집합 수업-평가

◎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지역별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취지, 운영 과목, 일정, 수업 기능과 장비 활용 연수 실시



◎ **집합수업-평가** 지필평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신뢰도 제고, 교사와 다른 지역 학생을 직접 만나 점심도 함께 먹고 프로젝트로 시행 후 발표하거나, 온라인 수업에서 하지 못한 실험·실습 활동을 보완하며 축제 같은 즐거운 배움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



오프라인 지필평가



오프라인 학생 중심 수업

## — 2019 계획 및 제언

### 1. 2019년 계획

- 논산, 공주에 스튜디오를 추가 구축해 충남 전역으로 교육 기회 확대
- 권역별 집합 수업-평가 운영, 교통편 제공, 과목 특성에 따라 온라인 100% 수업-평가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시 교통 불편으로 인한 문제 단계적 해소
- 정규 일과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 지정: 덕산고, 한일고

### 2. 제언

교육부는 2019년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디딤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수업-평가-기록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양적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온라인 맞춤형 수업-평가 모델 공유와 수업 나눔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스템 기능 개선이 요구된다. 수업 중 튕김, 음향 전송 불량, 접속 장애 문제 해결과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버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정규시간 내 운영을 확대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간, 지역 간 벽을 낮추고 교육과정 공동 설계·운영, 학사일정 조정, 강사 공유 등을 위한 협의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 교부만 하고 운영은 거점학교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담당 교사가 강사 수급과 평가 관련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면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이 심화될 것이다. 시도 여건에 맞는 업무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처럼 교무학사 업무와 수업·평가 개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파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중요하다. 충남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교과목별로 수강 포기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수업과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운영 과목이 많아질수록 학생 맞춤형 수업-과정 평가 경험이 부족한 교사나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수업-평가-기록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우수한 지도강사 인력풀을 넓혀야 한다.

2019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 무지갯빛 고운 꿈이 커가는 작은 지구촌 학교

김영미(김해합성초등학교 교사)



## — 개방과 포용의 역사가 흐르는 김해

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지였던 김해는 고대 세계화의 중심에 있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AD46년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황후로 맞이하여 140여 년을 같이 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열 아들 중 두 아들에게 왕비와 같은 허씨 성을 따르게 하여 그들이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수로왕과 허황옥에 관한 설화는 당시 가야인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도시의 숙명처럼 2019년 현재 김해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김수로왕릉을 중심으로 '경남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외국인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쇠락해져 가던 구도심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왕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해합성초등학교(since 1909)는 16개국의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27%에 이르는 '작은 지구촌' 학교가 되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급 수		2	2	2	2	2	2	12
학생 수		35	37	37	43	35	50	237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3	6	7	5	2	2	25
	국내출생							
	가정자녀	6	8	7	4	6	5	36
	외국인 가정 자녀							
계	9	14	15	9	9	8	64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25.7	37.8	40.5	20.9	25.7	16.0	27.0
다문화학생 출신국 현황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		베트남(14), 러시아(2), 우즈베크(13), 카자흐스탄(5), 우크라이나(3), 일본(2), 중국(4), 미얀마(1), 태국(1), 스리랑카(1), 파키스탄(2), 캄보디아(4), 필리핀(1), 캐나다(2), 시리아(5), 모로코(1)						

### — 준비되지 않은 만남

2016년 3월 김해합성초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1학년 담임이 되었다. 입학식이 있던 날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자매가 우리 반에 있음을 알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의 담임이 되는 일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 뒤 학교에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왔다. 굽직한 선의 남자와 차도르를 입은 앳된 얼굴의 여자들 그리고 이국적인 외모의 아이들이었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는 우리 반이 되었다. ○○과 나는 애써 웃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서로에게 당황하고 있었다. 이국적인 외모보다 무슬림이라는 것이 나를 더욱더 두렵게 했다. 그 당시 IS의 만행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었기에 시리아라는 국적은 모두를 들썩이게 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선입견과 마주했다. 그 후로 외국국적 재외동포 4세의 취학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긴 교직 생활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위기였다. 그렇게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시작되었다.

### —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다

갑자기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과 귀국 학생으로 인해 2016년 9월 정책학교인 예비학교 특별학급이 개설되었고 2017년 나는 특별학급 전담교사가 되었다.

예비학교에 입급하는 학생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언어장벽과 낯선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언어적 문제는 교우관계, 학업성취, 생활적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시간 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수준별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대부분 한국어를 못 하거나 서툰 경우가 많아 최대한 한국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김해시 방문교사와 김해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사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음성지원 도서를 이용한 단계별 독서지도와 함께 초기 언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원격반으로 환급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교과적응을 돕기 EBS사회통합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때로는 한국어 학습보다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찾아주는 일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다양한 방법의 배움중심 수준별 한국어 수업 시간 •

## — 나눔과 봉사, 따뜻한 이웃

국적, 인종, 종교와 문화적 배경까지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래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가정방문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김해함성 교육가족이 지혜를 모았다. 다름의 장벽은 신뢰를 쌓아가는 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리아 가족은 조혼 풍습이 있어 학부모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전쟁을 피해 7여 년의 타국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2016년이 저물어갈 즈음 6개월 여의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떠나보낸 어린 부모의 아픔에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이 없었기에 막내아들의 병원비로 그들이 가진 대부분의 돈을 지급해야했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의료비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2016년 11월 김해WISE' MEN과 협약을 맺어 가족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회장님이셨던 김해중앙병원 원장님께서 13가정 가족 30여 명의 무료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학생과 가족 100여 명이 무료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시리아 학생 할머니는 심장병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무료 의료지원은 이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 이웃의 김해이주민센터 목사님의 소개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료 봉사팀과 협약을 맺으면서 학교에는 월 1회 무료 진료소가 열리게 되었다. 중앙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른 가족과 지역 이주민들의 건강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원의 원내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치과 치료까지 무료로 받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 이주민센터 목사님과 미국 개혁신교회 도움으로 5명의 시리아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지원을 확대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한 분과 지역 기업의 도움으로 시리아 가족을 위한 마을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김해 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되었다. 아마도 2019년은 시리아 가족들이 또 한 발자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이웃, 단체와 기관들이 줄을 잇는다. 이제 예비학교는 우리 지역 사랑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예비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인간존중과 박애의 민족성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이미 가난한 이방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시혜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친구로서 따뜻한 이웃으로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든든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 학생과 가족들은 씩씩하고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예비학교 학생들도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해진 학생들은 학교 무료진료소에서 통역봉사를 통해 다른 이주민을 돕는다. 비즈쿨 동아리 활동으로 익힌 솜씨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친구도 도왔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고신복음병원을 방문하여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해, 공감, 배려, 존중의 송고한 실천은 다문화사회로 성공적 이행을 넘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문화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와이즈맨 멘토링



미국 개척교회와 부산이주민센터 시리아 유아교육 지원

부산대치과대학원 선생님과



고신의료봉사단 무료 진료소

지역 축제 참가



2018.12.2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위문공연

### — 내재된 잠재력을 깨워 꿈 찾아주기

“이브라힘(가명)은 꿈이 뭐야?”, “폐차장에 취직해서 돈 벌어 가족을 돌보는 것이 꿈이에요.” “시리아에서 살 때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장애를 갖게 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이 꿈이 되어 버린 아이, 시작부터 많은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고 자존감은 매우 낮으며 미래를 꿈꿀 여유조차 없다.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것이 시급했다. 학부모도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진로 개척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 학생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비즈쿨과 도시농부사업 등 유관기관과 단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언어 대회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얼마 전 ‘아이좋아 경남교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온 ○○과 △△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이를 돕겠다고 했다. 취학한 뒤 처음 몇 달간 교실에 앉아 울기만 했던 □□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밝은 웃음을 보인다.

꿈을 찾아 주는 일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 숨은 잠재력을 깨워 꿈 찾아주기 •

### —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디언어로 친구는 ‘나의 불행은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서로의 등을 내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년부터 2년간은 문화다양성 정책학교를 하며 분기별로 문화공간의 날을 운영하였다. 우리 교육가족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힘썼다. 2018년부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시민 교육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다름의 조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미래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나절이면 하나가 되어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무지개 같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서툴지만 진솔하게 말을 타고 마음을 연다.

아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담임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모든 선생님은 오늘도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

더운 여름날 아침, 금방 딱 싱싱한 방울토마토를 한 바구니 가져다주시며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교장선생님의 살가운 관심과 교감선생님의 알뜰한 챙김, 복지사, 영양사, 상담사, 보건교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간다.





# 교육통계 FOCUS

---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 형평성의 현 주소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국제교육통계팀장)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형평성의 현 주소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국제교육통계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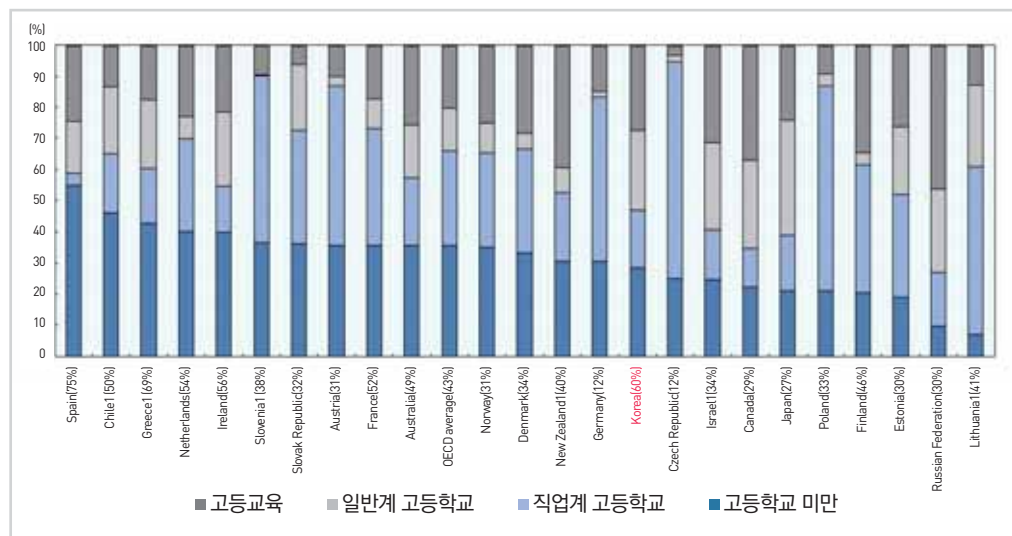


—— 교육형평성이란 “성별, 사회 경제적, 민족적 또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사회를 통해 역량 개발 및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OECD, 2018, p.13)을 의미하며, 200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현 정부 기조에서 “포용”은 핵심 키워드이며, 이에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복지’, ‘교육격차’ 등 교육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UN 총회에서 지구촌 전역 국가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합의한 지속가능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르면, 형평성(equity)은 교육 분야 목표(SDG4)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OECD는 <2018 OECD 교육지표 - Education at a Glance>(이하 “2018 OECD 교육지표”)의 주제를 “교육에서의 형평성(Equity in the Education)”으로 설정하고, 46개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주요 교육지표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경제사회문화적지위(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s, 이하 “ESCS”), 성별, 지역, 이민 여부에 따른 교육형평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상황과 연관성이 적은 이민 여부와 분석 범위가 다소 제한된 지역을 제외한, ESCS와 성별에 따른 한국의 교육형평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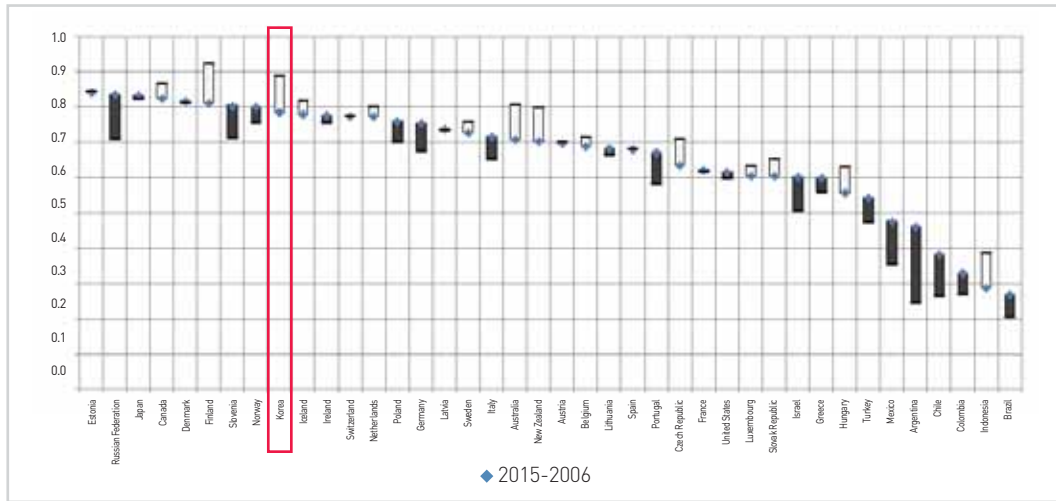
먼저, 교육형평성 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ESCS는 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적지위에 따라 개인의 교육 참여 및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림 1]은 고등학교 교육(후기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의 교육 이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의 28%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이하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이수자는 25%, 직업계 고등학교 이수자는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을 크게 뛰어넘는 고등교육 이수자, 즉 대졸자는 27%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이상이며,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의 뒤를 잇는 높은 수치였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의 교육 참여 양상에 나타난 한국의 교육형평성은 OECD 평균에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즉, OECD 평균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은 낮고 그 이상의 교육 성취를 이루는 양상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그림 1] 후기중등교육 미만 교육 수준 부모를 둔 자녀의 교육 이수 수준 (2012년 또는 2015년 자료) ●

\*출처: 2018 OECD 교육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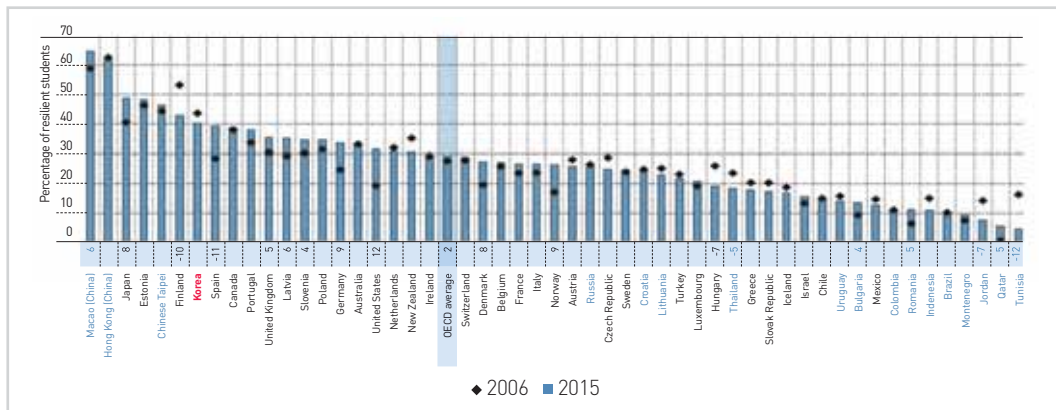
교육성과 측면에서 ESCS에 따른 교육형평성을 분석한 지표로는 PISA 수리력 점수를 이용한 지표가 있다. 여기서는 ESCS 상위 25%에 속하는 15세 중 최소 숙달 수준인 PISA 2수준 이상의 수리력을 보인 학생(부모)과 ESCS 하위 25%에 속하는 15세 중 PISA 2수준 이상 수리력을 보인 학생(분자)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본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ESCS가 높고 낮음에 따라 기본 수리력을 갖추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없는 것이고 1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수리력 형평성 수치는 0.8로 에스토니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높은 수치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ESCS가 기본 수리력을 갖추는데 미치는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6년 0.9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로, 한국의 2015년 교육형평성은 10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2] ESCS에 따른 PISA 수리력 최소 숙달 수준(2 수준) 달성자 비율 (15세 기준) •

\*출처: 2018 OECD 교육지표

PISA 과학성취도 점수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육형평성을 살펴본 지표로는 “회복탄력적 학생 비율(resilient students)”이 있다. 회복탄력적 학생이란 ESCS는 하위 25%에 속하지만 과학성취도는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의미한다(여기서 ESCS 비율 기준은 개별 국가이고 과학성취도 비율 기준은 PISA 전체 참여국이다). [그림 3]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5세 중 회복탄력적 학생 비율은 약 4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과학성취도 수준이 전반적으로도 높은 것에도 기인하지만, 낮은 ESCS에 비해 높은 과학 성취를 내는 학생의 수준도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PISA 수리력 형평성 수치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 [그림 3] 회복탄력적 학생 비율 (15세 기준) •

\*출처: OECD, PISA 2015 데이터베이스

다음으로 성별은 교육형평성 논의에서 ESCS만큼 많이 주목받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그런데 2018 OECD 교육지표에서의 성별 교육형평성 논의는 ‘교육’ 자체에서보다는 ‘교육 이후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약자로 가정되는 여성의 교육 참여율이 이미 남성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성과는 남성보다 여전히 낮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및 주요국 25~34세 성인의 교육 이수 수준(최종학력) 분포를 보여주는 [표 1]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경우 여성 최종 학력은 고등교육(대졸자에 해당) 75%, 후기중등교육(고졸자에 해당) 23%, 후기중등교육미만(고졸 미만에 해당) 2%인 것에 비해, 남성은 대졸자 65%, 고졸자 33%, 고졸 미만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의 학력보다 상향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여성 학력 상향화 경향은 2007년에도 존재하였지만 10년간 그 폭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 모두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 그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고 강한 편이었다.

• [표 1] 25-34세 인구의 성별 교육 이수(최종학력) 비율 추이 •

국가	후기중등교육 미만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OECD 평균	22	17	19	14	20	15	49	46	44	37	47	41	30	38	38	50	34	44
한국	3	2	2	2	3	2	43	33	40	23	42	28	53	65	58	75	55	70
핀란드	12	11	8	8	10	10	57	55	44	42	51	49	31	33	48	50	39	41
프랑스	18	15	16	13	17	14	45	45	38	38	41	42	37	39	46	49	41	44
독일	14	14	16	13	15	13	64	56	61	55	62	56	22	30	23	32	23	31
일본	m	m	m	m	m	m	m	m	m	m	m	m	50	59	58	62	54	60
영국	19	13	21	12	20	12	38	38	36	34	37	36	43	50	43	54	43	52
미국	15	9	11	7	13	8	49	48	44	41	47	44	36	43	45	52	40	48

\*단위: % \*m: 결측치

\*출처: 2018 OECD 교육지표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의에서 여전히 여성을 약자로 상정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는 주요국 25~34세 성인의 최종 학력에 따른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최종 학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즉,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랫동안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후 일을 할 확률은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국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별 격차는 OECD 평균 수준이다.

• [표 2] 25-34세 인구의 교육 이수(최종학력)에 따른 성별 취업률 추이 •

국가	후기중등교육 미만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07	'17
OECD 평균	76	71	48	45	63	60	88	84	69	68	79	77	91	89	81	80	85	84
한국	71	70	42	58	61	64	76	71	51	54	64	65	84	81	65	69	74	75
핀란드	74	58	53	33	66	48	85	79	70	67	78	74	94	90	81	79	87	83
프랑스	75	64	45	37	61	52	89	82	72	66	81	74	90	90	84	84	87	87
독일	68	65	42	43	55	55	82	86	72	79	77	83	93	90	83	84	88	87
일본	m	m	m	m	m	m	m	m	m	m	m	m	92	93	69	79	80	86
영국	78	76	44	49	60	63	90	91	73	75	82	83	93	93	85	84	89	89
미국	77	69	46	42	64	57	84	80	68	66	76	73	92	88	81	81	86	85

\*단위: % \*m: 결측치

\*출처: 2018 OECD 교육지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약세는 임금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3]은 전일제 근로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25~64세 인구의 경우 여성의 임금은 고졸 미만일 때 남성의 70%, 고졸자일 때 65%, 대졸자일 때 7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노동시장 성과 양적인 지표인 취업률에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인 임금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진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대비 큰 편에 속하였다. 실제 [표 3]에 제시된 주요 국가 중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대졸자를 제외하고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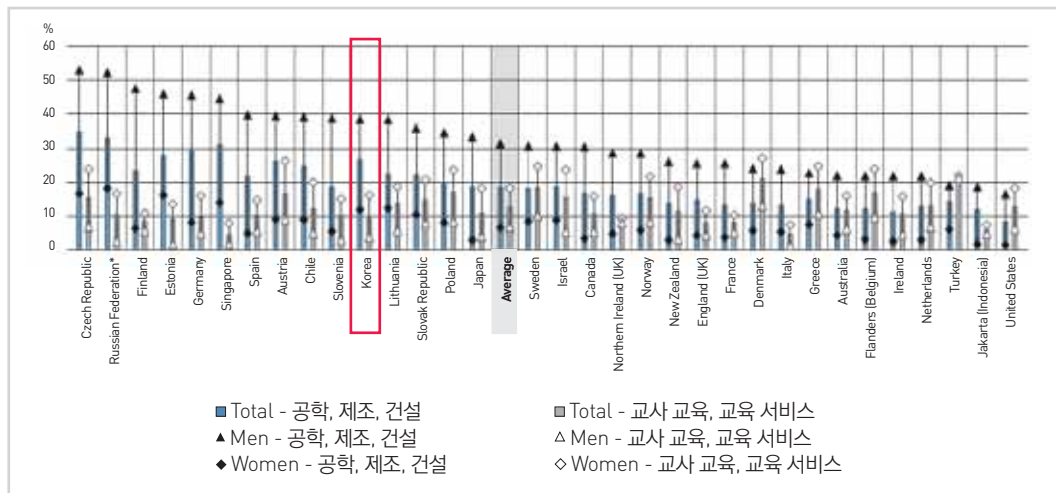
•[표 3] 교육 이수 수준(최종학력)별, 연령별 전일제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국가	후기중등교육 미만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25-64	35-44	55-64	25-64	35-44	55-64	25-64	35-44	55-64
OECD 평균	78	76	78	78	76	79	74	77	73
한국	70	77	66	65	68	62	72	75	74
핀란드	81	79	80	79	76	79	77	76	74
프랑스	76	c	c	83	87	95	72	80	c
독일	75	c	76	84	80	89	74	83	82
일본	m	m	m	m	m	m	m	m	m
영국	79	73	84	74	70	73	78	79	67
미국	74	73	87	73	68	78	70	70	71

\*단위: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m: 결측치 \*C:0에 가까움

\*출처: 2018 OECD 교육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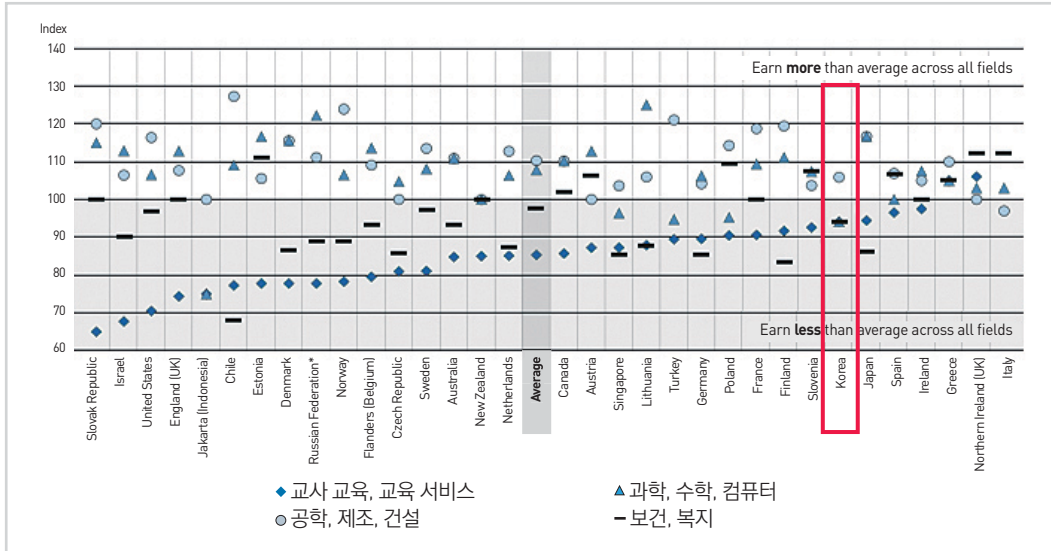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그중 다수는 노동시장 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다시 교육적 논의로 돌아와 교육 내 요인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전공 분야 성별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4]는 대표적 남성 강세 전공인 공학, 제조, 건설과 여성 강세 전공인 교사 교육, 교육 서비스의 성별 전공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확연하게 공학, 제조, 건설 전공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교사 교육, 교육 서비스 전공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남성의 경우 25~64세 대졸자 중 39%가 공학, 제조, 건설 전공, 21%가 사회과학, 경영, 법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26%가 인문, 언어, 예술 전공, 뒤를 이어 16%가 교사 교육, 교육 서비스 전공인 것으로 나타나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 격차가 뚜렷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4] 2012년 기준 25-64세 고등교육 이수자 성별 전공 분포•

\*출처: 2016 OECD 교육지표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 격차가 앞서 살펴본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은 전공별 졸업자 임금을 통해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5]는 국가 전체 평균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 분야별 평균 임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성 강세 분야인 공학, 제조, 건설 분야 종사자의 임금은 국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그 외 분야는 모두 국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성별 전공자 분포와 함께 해석해보면, 고소득 전공 분야인 공학, 제조, 건설에 남성이 많이 종사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짐을 추측할 수 있다.



● [그림 5] 전공 분야별 임금의 상대적 수준 ●

\*출처: 2016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의 교육형평성 양상을 종합해 보면, 먼저 2015년 기준 학생의 부모(가정)배경과 교육성과의 관계는 OECD 평균 대비 적은 편에 속하였다. 즉, 학생의 ESCS가 교육 이수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그 영향력이 커진 경향을 보여, 교육형평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악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2017년 여성의 교육 이수 수준이 남성의 교육 이수 수준을 웃돌아, 양적 교육성과 측면에서 성별 격차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 선택에 있어 성별 분리와 여성의 낮은 취업률 및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 등은 여전히 존재하여, 성별 교육형평성은 교육과 노동시장, 넓게는 사회 전체에서 풀어나가야 할 이슈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OECD. (2015). 2015 PISA Database. OECD.



##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 회 비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의처 지식정보화실(정보자료)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국문)  
<http://www.kedi.re.kr>



KEDI 홈페이지(영문)  
<http://eng.kedi.re.kr>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센터  
<http://necet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http://eduma.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대학역량진단센터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http://www.afterschool.go.kr>



디지털교육연구센터  
<http://openschool.kedi.re.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인성교육지원센터  
<http://insung.kedi.re.kr>



자유학기제  
<http://www.ggoomggi.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AskKEDI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Wee 프로젝트  
<http://www.wee.go.kr>



ISSN 1228-291X

「교육개발」웹진



2019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잠재력을 키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혁신적인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